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2015. 12.

한종석 · 윤성주 · 최승문

서 언

빈곤과 경제성장, 그리고 불평등과 경제성장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과거 몇 십년에 걸쳐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 빈곤율은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 심화로 인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화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에 각 국가들에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 및 소득 분포 개선을 위한 정책에 힘쓰고 있다.

소득 분포 개선을 위한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포의 전반적 추세 및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 분포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분석분야 및 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Review of Economic Dynamics의 특별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분포에 대한 조사에 앞서 우리나라 여러 연구들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4가지 미시자료들에 대해 그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소득 분포 관련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소득 분포의 동태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성별, 학력, 연령 등과 같은 관측되는 부분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자료를 통해서는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고용, 청년실업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 수준 및 소득 불평등, 그리고 소득 분포의 동태적 움

직임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까지 포괄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이와 같은 폭넓은 분석내용은 향후 소득 불평등 관련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측면에서의 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 불평등의 변화 및 그 요인에 대한 큰 틀에서의 다양한 분석으로, 향후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한종석 박사, 최승문 박사, 윤성주 박사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동국대 김낙년 교수님과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님, 서울대 이철인 교수님, 통계개발연구원 김혜련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익명의 논평자 두 분과 착수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통해 좋은 조언을 해주신 원내외 토론자들, 그리고 자료정리와 편집을 위하여 애써준 조은빛 연구원, 김평강 연구원, 김인유 연구원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저자들이 속한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15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중요성 및 연구방법

최근 국내외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소득 분포의 악화는 총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총생산 감소 및 실업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은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여 경제성장의 중요 요소인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소득 분포에 대한 논의 및 분석보다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집중도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특정 소득계층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지만, 특정계층에 대한 연구 또한 전체 국민의 소득 분포 및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소득 분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왔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득 분포 추이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근거한다. 즉,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분석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네 가지 미시자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서는 분석분야 및 분석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Review of Economic Dynamics 특별판(RED2010)에서 제시하고 있

는 분석틀을 기준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근로소득 불평등 자체의 동태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성별, 학력, 연령 등과 같이 연구자가 자료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그리고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측면에서 임금 수준 및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II. 소득관련 자료 간 정합성 비교

근로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그리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대해 인적 구성과 평균 월급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인적 구성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준거로 각 자료에 나타난 남성의 비율과 평균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남성비율의 경우 4개의 미시자료에 나타난 수준 및 추세가 준거자료와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평균연령의 경우에는 자료 간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노동패널의 자료가 준거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경제활동인구 자료와 가장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재정패널과 가구주로 구성된 가계동향조사는 준거자료보다 높게, 그리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준거자료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 구성비는 4개의 모든 자료에서 준거자료인 경제활동조사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긴 시계열에서 가장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급여의 경우에는 국민계정의 1인당 임금 및 급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모든 자료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재정패널이 시계열은 짧으나 국민계정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국민계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후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국민계정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계동향조사는 한국노동패널보다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모든 측면에서 준거자료에 가장 근접한 하나의 미시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각각의 조사자료가 각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사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한 하나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 및 소득 분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4가지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

1. 전체근로소득 불평등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GINI 계수, 90/10 분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세후소득인 한국노동패널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에서 1995년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긴 시계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1980년대에는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V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인 90/50, 50/10 지표를 이용하여 전체 근로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상위 소득계층뿐만 아니라 하위 소득계층에 의해서도 주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2. 관측되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남성 평균임금 대비 여성 평균임금으로 성별 간 임금격차를 살펴본 결과, 다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대부터는 그 격차가 6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

간 임금격차의 경우,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1980년에 발표된 대학입학정원 증대 및 졸업정원제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1987년부터 급속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대학교육의 프리미엄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남성이 50%, 여성이 40% 수준으로 남성의 프리미엄이 1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학력 간 임금격차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든 코호트에서 대졸자의 임금격차가 최초 노동시장 진입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대졸 프리미엄이 노동시장 경험연수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는 미국의 실증분석 결과와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간 임금격차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감소하다가 199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임금소득이 남성은 45~54세, 여성은 25~34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이 발생하며, 경력단절 이후의 임금 수준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연령, 교육수준, 성별 등 연구자들이 자료를 통해 관측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연구자들이 관측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임금 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즉 연령, 교육 등 개인의 생산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후 남은 잔차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가장 긴 시계열을 가지고 있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잔차의 표준편차는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추세를 보

이나 그 정도는 실질임금의 표준편차보다는 낮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질임금의 표준편차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잔차의 표준편차로 측정된 개별 생산성 충격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보험 증가와 입직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잔차 부분을 고정효과 부분과 생산성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정효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나타낸 반면,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으로 구성된 생산성 충격 부분은 추정방법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 수준과 소득 불평등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소득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임금프로파일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와 같은 고도 성장기를 경험하지 못한 1960년대에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임금프로파일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코호트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의 불평등 수준이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생애기준을 기준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고도 성장기를 통해 높은 임금 수준과 낮은 불평등을 경험한 반면, 그 이후의 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높은 코호트 내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IV. 근로소득 불평등 국가 간 비교

근로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RED2010 기준에 따른 연구결과

가 존재하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추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로그 실질임금의 표준편차로 측정된 근로소득 불평등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한국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스웨덴은 감소추세, 영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감소추세, 그리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90/50 및 50/10 지표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소득 불평등을 살펴본 결과,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은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고소득층 내의 불평등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 증가가 전체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내의 불평등 증가가 전체 소득 불평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간 임금격차에 있어서는 독일의 경우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에는 남녀 간 임금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성별 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고용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두 국가에서의 여성임금이 경력단절 이전의 경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에서는 연령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달리 V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제도 변화로 인한 학력구성비의 변화와 관련이 높으므로 판단된다. 학력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198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고 있는데 이 또한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웨덴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한국에서 로그 잔차임금의 표준편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도는 한국이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관측되지 않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소득 분포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V. 시사점

본 연구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내의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세정책을 통한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소득 분포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중요하며, 이는 공적부조,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여성의 임금 수준 증가로 인해 남녀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편이다. 이에 정책당국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보육, 육아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이 낮은 현실에서 보육지원 등의 정부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여성의 임금 수준을 증대시키는 정책과 더불어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력단절 이후에도 이전의 경험연수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기회비용의 증가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참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이 1987년 이후 감소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성장을 제고 및 대졸자 취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졸 프리미엄이 경험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를 통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불평등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생산성에 대한 충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세 및 재정지출정책을 통한 정책당국의 개입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I. 서론	19
II. 선행연구	25
1.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외 연구	25
2.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내 연구	30
III. 자료설명	40
1. 자료에 대한 개괄	40
2. 변수 구성 및 표본 선택	52
IV. 자료 간 정합성 비교	57
1. 인적 구성 비교	57
2.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 비교	61
3. 소결	68
V.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	72
1. 전체 근로소득 불평등	72
2. 관측되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77
3.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91
4.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 수준과 소득 불평등	103
VI. 근로소득 불평등 국가 간 비교	111
1. 근로소득 불평등	112

2. 관측되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116
3.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122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23
1. 요약	123
2. 정책적 시사점	128
참고문헌	131
부 록	138

표목차

〈표 II-1〉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변화 선행 연구 정리	34
〈표 III-1〉 자료 간 소득 분류 비교	49
〈표 III-2〉 자료 간 특성 비교	50
〈표 III-3〉 학력 구분 구성 방법	53
〈표 IV-1〉 명목표시 평균 월급여 자료 간 비교	64
〈표 IV-2〉 명목임금, 실질임금, 실질임금 성장률 비교(5년간 평균)	67
〈표 V-1〉 명목표시 남녀별 평균 월급여	77
〈표 V-2〉 명목표시 학력별(고졸, 대졸) 평균 월급여	79
〈표 V-3〉 연령별 고졸, 대졸자 평균 월급여 성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4
〈표 V-4〉 명목표시 연령별 고졸, 대졸자 평균 월급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5
〈표 V-5〉 명목표시 연령별(만 25세~34세, 만 45세~54세) 평균 월급여	88

그림목차

[그림 IV-1] 자료 간 성비와 연령 비교	58
[그림 IV-2] 자료 간 학력 구성비 비교	60
[그림 IV-3] 자료 간 1인당 월평균 임금 비교	63
[그림 IV-4] 1인당 실질임금 성장률	66
[그림 V-1] 소득 불평등: 표준편차 - 로그실질임금	73
[그림 V-2] 소득 불평등: GINI - 실질임금	74
[그림 V-3] 소득 불평등: P9010 - 실질임금	75
[그림 V-4] 소득 불평등: P9050, P5010 - 실질임금	76
[그림 V-5] 여성과 남성 간 임금 격차	78
[그림 V-6] 학력 간 임금 격차	80
[그림 V-7] 남녀별 학력 간 임금 격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1
[그림 V-8] 연령별 고졸, 대졸자 실질임금 추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3
[그림 V-9] 연령별 고졸, 대졸 실질임금 표준화 추세(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4
[그림 V-10] 연령별 학력 간 임금 격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6
[그림 V-11] 연령 간 임금 격차 - 실질임금	89
[그림 V-12] 남녀별 연령 간 임금 격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90
[그림 V-13] 로그 실질 임금 잔차의 표준편차	95
[그림 V-14] 전체 근로소득 불평등 중 잔차 비율: 잔차 분산/전체 분산	96
[그림 V-15] 잔차 분산 분해 결과(한국노동패널)	100
[그림 V-16] 코호트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전체	104
[그림 V-17] 코호트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남성	105
[그림 V-18] 코호트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여성	106
[그림 V-19] 코호트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전체	107

[그림 V-20] 코호트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남성	108
[그림 V-21] 코호트별 생애주기 로그 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여성	109
[그림 VI-1] 국가 간 비교 - 로그 임금 표준편차	112
[그림 VI-2] 국가 간 비교 - P9010	113
[그림 VI-3] 국가 간 비교 - p9050, p5010	113
[그림 VI-4] 국가 간 비교 - p9050, p5010(1991년 표준화)	115
[그림 VI-5] 국가 간 비교 - 성별 간 임금격차	116
[그림 VI-6] 남녀 간 고용률 격차(한국)	117
[그림 VI-7] 국가 간 비교 - 남녀별 연령 간 임금격차	118
[그림 VI-8] 국가 간 비교 - 연령 간 임금격차	119
[그림 VI-9] 국가 간 비교 - 학력 간 임금격차	120
[그림 VI-10] 국가 간 비교 - 로그 잔차 임금 표준편차	122

부록 그림목차

[부도 1]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구성비 비교	138
[부도 2] 피용자보수 2010년 기준과 2005년 기준 비교	139
[부도 3] 연도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전체	141
[부도 4] 연도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남성	142
[부도 5] 연도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여성	142
[부도 6] 연도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전체	143
[부도 7] 연도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남성	143
[부도 8] 연도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여성	144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 성장전략을 전수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어 왔다. 반면, 남녀 간 임금 격차나 학력 간 임금 격차, 혹은 GINI 계수나 90/10 비율과 같이 기존 성장 지표와는 달리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국 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의 관심사가 높은 소득수준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면서 한국 경제에서 불평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Piketty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어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낙년(2012a, 2012b)과 같은 연구들은 Piketty and Saez(2003)의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한국에서의 상위 소득 1% 그룹에 대한 소득 집중도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소득 분포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기술 진보나 교역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소득 분포를 노동생산성에 대한 분포로 인식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생산성의 분포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지난 50년간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지속되어 왔으며 동시에 대졸자와 고졸자의 노동시간의 격차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숙련편향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였다(Katz and Murphy, 1992; Card and Lemieux, 2001; Autor, Katz, and Kearney, 2008; Carneiro and Lee, 2011).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실증분석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소득격차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보다는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소득 분포를 연구하는 방식은 소득격차를 노동공급과 연계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남녀 간의 고용률이나 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남녀 간의 소득격차를 통해서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장년 간의 노동공급의 차이를 양자 간의 임금격차에서 나타나는 생산성의 차이 등으로 분석하거나 생애주기에서 노동시간과 임금의 형태가 역U자 형태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연구(Jaimovich and Siu, 2009; Jeong, Kim and Manovskii, 2015)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의 연구이다. 소득 분포 연구 방향의 마지막 측면은 소득 분포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먼저 소득 분포의 분산이나 10분위 소득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소득 분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공한다.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학력, 연령, 성별 등에 대한 보수율(rate of return)의 변화로 소득 분포의 변화가 얼마나 설명되는지 살펴본다. 이후 이와 같이 관측되는 요인(observed factor)들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 부분은 비관측 요인(unobserved factor)으로 소위 임금방정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잔차 부분에 해당한다. 비관측 부분을 비관측 고정효과 부분(unobserved fixed effect component)과 일시적 충격(transitory shock) 부분으로 요인 분해한 결과, 일시적 충격 부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관측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증가의 상당 부분이 시장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발생한다고 결론짓고, 정부는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 등을 통해 시장충격에 대한 보험(insurance)을 제공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확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득 분포 혹은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원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또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공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분포나 불평등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떤 측면에서 불평등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는 전체적인 소득 분포에 대한 분석보다는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소득 분포 자체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이 관측되는 요소들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나 관측되지 않는 부분이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전체 분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관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불평등과 비관측 부분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0년 Review of Economic Dynamics(이하 RED2010)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온 소득 분포에 대해 특별판(special issue)을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9개 국가¹⁾에 대해 소득 분포의 동태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횡단면 분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제공하는 것은 최근 거시경제학의 흐름과 관계가 있다. 전통적으로 거시경제학은 GDP나 총소비, 총투자 등과 같이 총계변수(aggregate variables)들이 연구 대상이었다. 총계변수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성장이론으로 발전한 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은 경기변동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거시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최근 그 범위를 총계변수에서 총계변수를 구성하는 전체 분포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면서 소득 분포 등이 시계열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 등으로 분석 범위가 확대되었다. 연구 대상이

1) 분석 대상인 9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멕시코이다. 2014년에 위의 특별판과는 별도로 일본에 대한 분석이 실리면서 분석 국가가 10개로 늘어났다.

총계변수에서 분포로 확장되는 데는 Bewley(1986)이나 Imrohoroglu(1989), Huggett(1993), Aiyagari(1994), Rios-Rull(1995), Krusell and Smith(1998), Chang and Kim(2007) 등과 같은 이론 모형들의 발전이 기여를 하였다.²⁾ 동시에 소득 분포를 비롯한 각종 총계변수의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들은 다시 이론 모형의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양자 간의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하면서 발전해왔다. 특히 최근 거시경제학에서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 기법이 주요 방법론으로 대두되면서 자료와 모형 간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량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캘리브레이트(calibrate)하거나 추정(estimate)한 후 모형이 현재 경제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한다. 이렇게 구성된 모형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변화를 도입하여 경제가 변화하는 방향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수들을 캘리브레이트 하는데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모수들의 값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각종 목표 모멘트(target moment)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서 보다 정확성이 높은 정량적 분석을 담보하는 각종 실증분석 결과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Review of Economic Dynamics의 2010년 특별판은 이러한 수요에 바탕을 두고 탄생하였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데이터

2) 이상의 연구들은 개별 경제주체에 개별 생산성 충격(idiosyncratic shock)과 이들 충격에 대해서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보험(insurance)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불완전 시장(incomplete market)을 도입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 소득과 소비, 자산에 대한 횡단면 분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Huggett(1993)은 생산부분을 축약한 자원 경제(endowment economy)에서 분석을 하고 Aiyagari(1994)는 생산부분으로 확장시켜서 현재 가장 널리 활용(work-hour)되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heterogeneous agent model)을 구축했다. Imrohoroglu(1989)와 Krusell and Smith(1998)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경기변동으로 확장하면서 각종 총계변수들의 분포가 경기 변동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Chang and Kim(2007)은 Krusell and Smith(1998)을 확장하여 노동공급에 있어서 이산적 선택(discrete choice)을 반영하여 경기 변동하에서 총노동시간의 변동성을 설명하였다.

들에 대한 통계량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계량은 흔히 사용되는 평균값은 물론이고 분산과 같은 2차 모멘트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능한 긴 시계열을 활용하여 각종 모멘트들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해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국의 연구자들은 해당 국가의 자료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시자료(micro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구성 방법과 표본선택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RED2010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 목표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각종 연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 결과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서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데이터 모멘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 경제에서 소득 분포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 소득격차의 추세를 국가 간 비교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는 네 가지 미시자료(가계동향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임금구조통계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이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표기)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파악하고, 자료별로 가능한 가장 긴 시계열을 구축하여 비교 분석한다. 전체 소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경우 자료들 간의 소득 정의를 통일시키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근로소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변수 구성과 표본 선택들에 대해서는 RED2010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 내의 자료들 간의 비교는 물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득 불평등은 전체 분포에 대해서 로그 값의 표준편차나 GINI 계수, 각종 10분위 비율 등을 통해서 파악한다. 더불어 관측되는 특성인 성별 간, 학력 간, 연령 간 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관측되는 특성으로 나타나는 소

득 불평등의 특징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생산성 충격의 크기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을 시작으로 제Ⅱ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소득 불평등 관련 연구들을 국외와 국내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온 소득 불평등 연구를 개괄한다. 연구에 사용되는 미시자료들을 설명하는 제Ⅲ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득 불평등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Ⅲ장은 연구에 사용되는 4가지 자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각 자료들 간의 특성을 비교하고 변수구성과 표본선택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에 앞서서 각 자료 간의 정합성에 대한 비교를 제Ⅳ장에서 한다. 제Ⅴ장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국가 간 비교는 제Ⅵ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제Ⅶ장에서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미시자료를 가지고 불평등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는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서 알려진 정형화된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들로 구분될 수 있다. 후자에 관련된 연구들은 모형이나 이론을 통해서 소득 분포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한 거시경제적 함의를 분석하거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³⁾ 본 연구는 전자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외 연구

소득 분포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시자료(micro data)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여러 국가들에서 소득 분포나 불평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는 경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자료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연구들은 미국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 연구들에 대한 논의 역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분포에 대한 미국 관련 연구들은 주로 Current Population Survey(이하 CPS)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이하 PSI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PS는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 실

3) Krueger and Perri(2006), Guvenen, Kuruscu and Ozkan(2009), Guvenen and Kuruscu(2009), Heathcote, Storesletten, and Violante(2010), Hornstein, Krusell, and Violante(2011), Quadrini and Rios-Rull(2014) 등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시하는 통계조사이다. CPS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자료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노동시장의 흐름(flow)을 분석하기 위해서 월별로 수집된 자료이다. 반면, 일반적으로 CPS March로 불리는 CPS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CPS ASES)는 매년 3월에 설문가구에 대한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지난해 소득, 노동시장참여(work experience), 각종 사회보장에 대한 수령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연간 자료이다. CPS 표본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군인을 제외한 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를 대표한다. 따라서 미국 전체의 소득 분포나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PSID는 미시건 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미국 가구를 대상으로 고용과 소득, 자산 정도, 소비내용, 가구원의 인적 사항들을 패널 형태로 구성한 자료이다. CPS는 횡단면 자료인 반면 PSID는 한 가구 혹은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패널자료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소득 분포에 대한 연구들은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Lemieux(2006)이나 Autor, Katz, and Kearny(2008)는 CPS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소득 불평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학력이나 연령과 같이 관측되는 부분과 비관측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반면 Shin and Solon(2011)은 소득 불평등 증가 원인을 소득 변동성의 증가로 분석을 하는데 이 경우 개인의 고정효과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패널구조로 되어 있는 PSID 자료를 활용한다.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미국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연구로 Gottschalk(1997)과 Heathcote, Perri and Violante(2010)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소득 분포 전체 동태적 움직임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들이라면 지금부터 살펴볼 연구들은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학력이나 연령과 같이 관측되는 요소들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Katz and Murphy(1992)를 시작으로 Krusell, et al.(2000), Card and Lemieux(2001), Carneiro and Lee(2011)와 같은 연구들은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의 증가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졸자로 대표되는 숙련 노동자(skilled worker)와 고졸자로 대표되는 비숙련 노동

자(uns skilled worker) 간의 임금격차를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로 설명한다. 반면, Jaimovich and Siu(2009)나 Jeong, Kim, and Manovskii(2015)는 유사한 접근 방식을 연령 간 임금격차에 적용하고 있다. 학력 간 임금격차의 차이를 코호트별로 분석한 연구들 또한 소득 불평등을 다른 측면에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Card and Lemieux, 2001; Caneiro and Lee, 2011).

최근 소득 분포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CPS나 PSID와 같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publically available data)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새로운 연구들은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SSA)의 Master Earnings File(이하 MEF) 자료를 가지고 소득 분포를 분석한다. MEF 자료는 미국 SSA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로 W-2 form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MEF는 성별, 인종, 출생일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농업, 자영업, 고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PS나 PSID와 같이 표본을 대상으로 소득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들과 달리 소득세관련 자료(W-2 form)를 바탕으로 소득 변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MEF는 top-coding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전체 표본 수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다.⁵⁾ 자료 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최근 MEF를 이용한 연구는 특정 연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Guvenen et al.(2013), Guvenen, Kaplan, and Song(2014) 등이 MEF를 이용한 연구로 소득 분포의 경기변동적인 움직임을 분산을 넘어서서 왜도와 첨도까지 분석하고 있으며, 패널 구축을 통해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변화

4) CPS나 PSID 같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표본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제 소득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특정값으로 나타낸다.(이를 top-coding 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top-coding을 5억원 원에서 하면 5억원 이상은 모두 5억원으로 표기된다.

5) 오히려 표본의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실증분석은 이들 중 10%를 임의 추출(random sampling)해서 사용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분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RED2010의 내용을 살펴보자. RED2010은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을 비롯한 9개 국가에 대해서 각 국가의 연구자들이 일반연구자들에게 공개된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이다. 국가별 미시자료 분석에 앞서 먼저, 각 자료들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 국민계정상의 1인당 근로소득과 비교를 한다. 이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1인당 근로소득이 과소상계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추세는 국민계정의 총량 변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임금 불평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수준 측면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은 성별 간, 학력 간, 경력(혹은 연령) 간 임금격차로 나누어 분석한다. 성별 임금격차는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 간 임금격차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 간 임금격차는 기본적으로 고졸자의 평균임금 수준과 대졸자의 평균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유럽 국가들은 대졸자의 임금 수준이 고졸자보다 1.4~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1.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 대상 9개 국가 중 대졸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멕시코가 대졸 임금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1.9로 나타나고 있다. 만 25~34세의 평균임금과 만 45~54세 평균임금의 비율로 측정하는 연령(혹은 경력⁶⁾) 프리

6) 연령 프리미엄(age premium)과 경력 프리미엄(experience premium)은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력과 연령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력은 노동시장에 편입된 이후 기간을 의미한다. 미시 자료에서 개인별로 노동시장에 최초에 진입한 시점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 시점부터 노동시장 편입 경력을 측정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자료의 경우 이와 같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경력(potential experience)을 활용하게 된다. 잠재적 경력은 개인의 최종학력 시점까지는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 연령에서 최종학력까지의 수학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측정된 경력은 연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RED2010에서는 표본 선택을 만 25세~60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학력을 마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시점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프리미엄은 연령 프리미엄과 동일해진다.

미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3~1.4 정도로 나타나지만 스웨덴과 멕시코는 이보다 낮은 1.2 수준, 러시아는 오히려 1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로 그 임금의 분산으로 측정된 전체 소득 불평등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경우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분산이 4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나타난 분산의 증가는 대부분 학력과 경험연수에 대한 프리미엄 증가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스페인과 러시아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유럽국가들 간의 소득 불평등 추세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학력 간 임금격차의 추세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과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숙련 편향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에서는 숙련 편향 기술진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개인과 가구의 노동공급, 사적이전, 자산 소득 등으로 나누어 추가적인 분석들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과 임금 프로세스(wage process or wage dynamics)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소득 불평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 프로세스 추정은 소득 불평등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원인을 생산성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득은 영구적 충격(permanent shock)과 일시적 충격(temporary shock)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국가에서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프로세스가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차분 방법과 수준 방법으로 추정된 각 충격의 크기가 동일해야 되나 모든 국가에

서 양자 간에 매우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⁷⁾ 이로 인해서 임금 프로세스에 대한 통계 모형이 잘못 설정(miss-specification)된 것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2.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내 연구

최근 Piketty의 논쟁(Piketty, 2015)으로 인해서 상위 1%로 대표되는 최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에 대해 관심이 높다. 따라서 소득 분포에 관해서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낙년(2012a,b)나 박명호·전병목(2014)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전체적인 소득 분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상위 1%의 소득 집중도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다.

김낙년(2012a)는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개인별 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소득 분포가 파레토 분포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파레토 보간법을 활용하여 각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경계 값을 추정하여 전체 소득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김낙년(2012b)도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의 소득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김낙년(2012a)과는 달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한정하여 시계열을 더 많이 연장하고 있다. 김상조(2014)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김상조(2015)는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소득’과 ‘종합소득’의 100분위 자료를 이용하여 2007~2012년 소득계층별 소득 및 결정세액을 추정하고 있다. 박명호·전병목(2014)도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상위 소득집중도를 추정하고 재정패널 2차~6차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이동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분포의 시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주된 관심사가 전체 분포보다는 최상위층에 대한 소득 집중도로 한정되어 있고, 국세

7) 차분 방법과 수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V 장 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청 자료의 특성상 개인에 대한 경제·사회적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변화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체 소득 분포의 동태적 움직임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에 대한 분포 혹은 GINI 계수와 같은 불평등 지수를 분석한다. 김종면·성명재(2003)는 소득세원 전망을 위해서 가구의 연령에 따른 소득 분포를 연도별로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의 분포를 연도별, 가구주 연령별로 분류하여 분포함수를 비모수적인 회귀분석방법(non-parametric regression)으로 추정하여 연도별 분포를 제공하고 있다. 추정결과 시점에 따라 평균과 분산은 변화하지만 한국 가구소득은 자연대수 정규분포(log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소득 분포에 관한 연구에서 이미 알려져 있듯이 임금 분포나 근로소득 분포는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르고 상위 1% 이상에서만 자연대수 정규분포보다 더 두꺼운 꼬리(thick tail)를 가진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생산성 충격을 자연대수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사용하면 근로소득 분포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⁸⁾

최상위 소득 분포나 전체 소득 분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인적사항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존재한다. 성별 간, 학력 간, 연령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지난 30년간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용성, 2007; 정진화, 2007; 금재호, 2011). 이 연구들은 임금

8) 김종면·성명재(200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낙년(2012a,b)에서 파레토 보간법을 사용하여 소득 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파레토 보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 분포가 파레토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김종면·성명재(2003)에 따르면 전체 분포는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다고 본다. 박명호·전병목(2014)에서도 소득 분포가 파레토 분포인지 여부를 검정한 결과 상위 5%를 벗어나면 소득 분포가 파레토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수준을 종속변수, 학력, 경력 연수, 근속 연수, 혼인 여부 등을 설명변수로 임금 방정식을 추정한 후 Blinder-Oaxaca 분해 방법이나 Oaxaca-Ransom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남녀 간 임금격차가 어떤 요인으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진화(2007)의 경우 교육연수나 근속연수, 연령과 같은 인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는 감소하는 반면, 인적 특성이나 직업적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임금부분의 격차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들도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강승복, 2005; 김우영, 2008; 박강우, 2014). 이 연구들은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격차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추세는 1980년부터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부터는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임금격차 감소 추세는 대졸자 공급이 늘어나면서 일어난 반면, 최근에 증가하는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은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박강우, 2014). 연령에 따른 임금격차는 성별 간 혹은 학력 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처럼 독립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임금방정식에 대한 추정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 프로파일을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 변화를 시계열을 통해서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소득 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자료들도 매우 많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가구소득에 불평등의 추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소득 범위는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포함하는 총소득에서부터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소득범위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9)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시장소득 = 경상소득 -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소득세 - 사회보장분담금

이 때 사용되는 불평등 지수 역시 GINI 계수, 분위수배율, 대수편차평균, 앳킨슨 지수 등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다. 상당 부분의 연구들이 세전 소득과 세후소득 간의 불평등 변화를 비교하면서 정부의 재분배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아래 표를 통해서 정리한다.

〈표 II-1〉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변화 선행 연구 정리

번호	연구명	목적	내용	불평등지수	자료정보					
					데이터 (분석기간)	소득범위	소득종류	동등화 지수	지역자 포함	기준치
1	성명재 (2001c)	· 분배구조 추이 및 · 조세정책 재분배 효과 분석 · 소득불평등 분석 · 국제비교	· 분배구조 추이분석 · 조세정책 재분배 효과 분석 · 모의실험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변화가 소득 분배구조 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위수 배율 (P90/P10, P95/P10, P99/P10) · 지니계수	가계 동향조사 (1982-2000)	· 총소득	세전 연간 개인 및 가구소득	\sqrt{n} n	포함	가구 기준치 (전용/미 적용)
2	정진호 외(2001)	·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 불평등 및 빈곤 의 실태 결정요인 분석	· 소득 불평등 수준 및 변화 에 대한 국제 비교 · 근로자가구 소득 분배 및 변화 분석 · 경제위기 이후의 근로소득 및 빈곤에 대한 동태 분석 · 빈곤 유형별 분석 및 동태 적 실태 분석을 통한 빈곤 결정요인 분석	· 지니계수 · 대수편차평균 · 앙카순지수 · 분위수 배율 (P90/10, P90/50, P90/10)	가구소비실태 조사 (1991/1996) 가계동향조사 (1990-2000)	· 시장소득 · 경상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및 세후 연간 가구소득	\sqrt{n}	미포함	적용
3	박찬용 외(2002)	소득 불평등 및 빈곤 수준 분석 이전소득과 직접세,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소득 불평등 변화 및 요인 분석 · 비근로자가구 소득추정 모형 개발	· 지니계수	가계 동향조사 (1996-2001) 가구소비실태 조사 (1996/2000)	· 1차소득 · 시장소득 · 총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연간 가구소득	\sqrt{n}	포함	-

〈표 II-1〉의 계속

번호	연구명	목적	내용	불평등지수	자료정보					기중치
					데이터 (분석기간)	소득범위	소득종류	동등화 지수	지역자 포함	
4	성명재 (2002b)	· 조세정책 변화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득 분배 현황 및 추이 분석 · 세부담 현황 및 추이 분석 (조세중도와 KFS지수 계산) · 세법개정이 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 분석 · 세부담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간 상관관계 분석 · 세계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분배효과 추정	· 지니계수 · 변이비승계수 · 대수편차평균	가계 동향조사 (1982-2000)	· 시장소득 · 총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연간 가구소득	-	포함	-
5	유경준· 김태일 (2003)	· 소득의 항상적 요소를 고려한 빈곤 분석 제안 · OECD 국가 비교	·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빈곤 현황 분석	· 지니계수	가구소비실태 조사 (1996/2000)	· 시장소득 · 경상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및 세후 연간 가구소득	$\frac{\sqrt{n}}{\sqrt{\frac{\text{어른수}}{n} + 0.5 \times \text{자녀수}}}}$	포함	적용
6	성명재· 김종면 (2004)	· 부문별 소득 분배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 교육수준 분포 변화, 맞벌이 가구 비중 변화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모의실험) · 가구유형별, 교육수준별, 맞벌이 가구, 산업부문별로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집단내 및 집단간 소득 분배 격차 분석	· 지니계수	가구소비실태 조사 (1996/2000)	-	세전 연간 가구소득	-	포함 (2003년)	-

〈표 II-1〉의 계속

번호	연구명	목적	내용	불평등지수	자료정보					지역자 포함	기준치
					데이터 (분석기간)	소득범위	소득종류	동등화 지수	자료정보		
7	박기백 외(2004)	· 정부지출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득세, 이전지출, 순수공공재 · 비순수공공재 지니계수 계산 · 이전지출의 경우 정부지출 전후의 소득 분포 비교 · 순수공공재: 행위집근법 · 비순수공공재: 편익집근법	· 지니계수	가계 동향조사 및 농가기계조사 (2003-1993)	· 시장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및 세후 연간 가구소득	\sqrt{n}	포함	-	
8	여유진 외(2005)	· 빈곤 및 불평등 동향 및 원인 분석 · 국제비교	· 빈곤 및 소득 불평등 변화 추이 분석 · 빈곤 및 불평등 원인분석을 위해 요인분해 방법 활용 · LIS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제 비교	· 분위수 배율 (P90/P10, P90/50) · 지니계수	가구소비실태 조사 (1996/2000) 국민생활실태 조사 (2004)	· 경상소득 · 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및 세후 연간 가구소득	\sqrt{n}	포함	개인 기준치	
9	성명재 (2005a)	· 가선패널을 구축하여 생애소득에 기초한 장기빈곤율 분석	· 소득 분배 구조 변화 추이 · 빈곤율 분석 · 가선패널을 이용하여 생애 소득에 기초한 빈곤율 분석	· 지니계수	가계 동향조사 (1982-2003) 가구소비실태 조사 (1991-2000) 한국노동패널 (1998-2002)	· 1차소득 · 시장소득 · 총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연간 가구소득	\sqrt{n}	포함	-	

〈표 II-1〉의 계속

번호	연구명	목적	내용	불평등지수	자료정보					
					데이터 (분석기간)	소득범위	소득종류	동등화 지수	지역자 포함	기준치
10	박기백 외(2006)	· 자원조달 방식에 따른 사회분야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 조세부담과 이전소득의 소 득계층별 분포와 소득재분 배 효과 분석 · 사회분야 지출의 귀착과 소 득재분배 효과 분석 · 조세 및 현금 및 현물 지출 의 총체적 분포와 소득재분 배 효과 분석 · 증세 및 사회분야 지출을 확대 할 경우 예상되는 분 배효과 추정	· 지니계수	가계 동향조사 (1995-2006)	· 시장소득 · 차분가능 소득	세전 및 세후 연간 가구소득	\sqrt{n}	포함	가구 기준치
11	원종학· 성명재 (2007)	· 소득 분배 격차 확대 요인과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소득 분배 추이 분석(연령별 /소득단계별) · 소득 분배 격차 확대요인 분석 · 임금격차 추이 및 원인 분석 (인근합수 추정 및 임금 격차 분해)	· 지니계수	가계 동향조사 (1982-2006)	· 시장소득 · 총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및 세후 연간 가구소득	-	포함 (2003-20 06년)	-

〈표 II-1〉의 계속

번호	연구명	목적	내용	불평등지수	자료정보					
					데이터 (분석기간)	소득범위	소득종류	동등화 지수	지역자 포함	기준치
12	이병희 외(2007)	· 빈곤 및 소득 분배 상태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 정부의 정책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빈곤 및 소득 분배 상태 및 분배구조 변화 추이 및 요인 분석 · 가구주 고용상태와 소득 불 평등 변화 요인분해 · 소득 불평등 확대와 저소득 근로 동태적 분석 · 공적이전 및 직접세 등 정부 정책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지니계수 · 5분위 · 10분 위배율	가계 동향조사 (1996-2006)	· 총소득 · 비경상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및 세후 연간 가구소득	\sqrt{n}	포함	-
13	반정호 (2008)	· 1996-2007년 소득 분배 현황과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조 세 및 공적이전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 소득 분배 현황 및 불평등 정도 분석 · 연도별 경상소득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추이 분석 · 연도별 조세와 사회보장부 담금 불평등도 개선효과 분석 · 지니계수 분해를 통한 불평 등 수준 및 기여도 분석 ·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 이션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 이 계층별 소득 분배에 미 치는 영향 실증분석	· 5분위 배율 · 지니계수 · 분위 점유율 · 절대적 상대적 빈곤율	가계 동향조사 (1996-2007)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총소득 · 시장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및 세후 연간 가구소득	\sqrt{n}	미포함	-
14	김준영 외(2009)	· 불평등지수 분해를 통해 집단 내 및 집 단 간 시계열적 흐름 분석	· 연도별 경상소득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추이 분석 · 연도별 조세와 사회보장부 담금 불평등도 개선효과 분석 · 지니계수 분해를 통한 불평 등 수준 및 기여도 분석 ·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 이션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 이 계층별 소득 분배에 미 치는 영향 실증분석	· 지니계수 · 지니계수 개선치 · 지니계수 개선율	가계 동향조사 (1982-2007)	· 경상소득 · 가처분소득	세전 및 세후 연간 가구소득	-	미포함	-

〈표 II-1〉의 계속

번호	연구명	목적	내용	불평등지수	자료정보					
					데이터 (분석기간)	소득범위	소득종류	동등화 지수	지역자 포함	기준치
15	최성은 (2011)	·전체 및 연령집단별 이진지출의 불평등 도 개선효과와 사회 후생개선효과 추정	·지니계수 및 사회후생 개선 효과 추정	·지니계수	한국 노동패널 (1998-2007)	·시장소득	세진 연간 가구소득	\sqrt{n}	-	-
16	강신욱 외(2014)	·1998년과 2008년 사이의 소득 분배 구 조 악화 원인, 자선 및 소비 불평등 문제 분석	·가구소득 불평등 변화 분석 ·가구소득 불평등 원천별 요 인분해 ·가계부채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적자 가구 소비 실태 분석	·지니계수 ·대수편차평균	가계 동향조사 (1998/2008)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세진 연간 개인 및 가구소득	\sqrt{n}	포함	가구 기준치

주: 1) 동등화지수 \sqrt{n} 은 $\sqrt{\text{가구원수}}$ 를 의미함.

2) 소득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처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총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경조소득 + 퇴직금 + 기타
- 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조세 - 사회보장부담금

자료: 선행 연구 자료를 이용해 저자작성

Ⅲ. 자료설명

본 장에서는 한국의 소득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변수구성과 표본선택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1. 자료에 대한 개괄

가. 가계동향조사¹⁰⁾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국민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를 측정 및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된 통계이다. 1942년 일제 말기에 처음 시작되었지만 1963년 통계국에서 30개 도시의 1,700개 가구를 대상으로 비목적 품목 분류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 실질적 자료 구축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1972년 다목적 표본 1차 개편을 시작으로 1983년까지 3차에 걸친 표본 개편이 일어났고, 1988년에는 전국 62개 도시로 지역을 확대하여 4,500가구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했다. 2003년에는 표본 개편을 하면서 도시가구 대상에서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전국가구로 확대되었으며 명칭도 이전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명칭이 개편되었다. 2006년에는 표본이 더욱 확대되어 1인 가구가 포함되었고 2008년에 『가계조사』에서 『가계동향조사』로 명칭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에는 소득 및 소비지출의 분류체계를 개편하는데, 이로 인해서 『가계동향조사』가 신분류와 구분류로 나뉘게 된다.

10) 본 절은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2011.8)와 통계청 홈페이지 가계동향조사 소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신분류는 2009년에 적용된 새로운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1990년까지 소급하여 구성된 자료인 데 반해 구분류는 2009년 이전의 분류체계에 따라 2008년까지 구축된 자료이다. 분류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신분류와 구분류 자료 간에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분류 자료만을 사용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기본적으로 가구주와 가구원에 대한 인적 사항과 가계소득과 지출로 구성된다. 가계소득은 가구주와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조사되며 소득원천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계동향조사가 제공하는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으로 정의하고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¹¹⁾ 이 중에서 경상소득은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근로소득은 가구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를 통칭한다. 사업소득은 목적이 특정된 사업장 유보분을 제외한 사업장으로부터 인출하여 가구에 전입되는 소득을 일컫는다. 재산소득은 재산의 운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으로 구성되고 개인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정부, 비영리단체 및 타 가구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이다. 가구 소득을 구성하는 다음 요소인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과 같이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일컬으며 기타수입은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 없이 자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현금 수입으로 구성된다.

소득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으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은 모두 세전소득이다. 세후소득은 경상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가처분소득만 존재하는데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에 대한 세후소득 자료

11)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 및 자산거래로 인한 손익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공되는 소득은 연간 월평균 소득으로 월별로 조사된 연간 소득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계동향조사는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시계열의 단절성이 있다.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신분류 자료를 사용한다. 하지만 신분류를 사용하더라도 조사대상 범위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긴 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서 2인 이상 도시가구로 한정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조사범위를 축소할 경우 정확한 소득 분포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 분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불가피한 표본 선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나. 한국노동패널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가계동향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패널 자료라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같은 자료들이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패널 구조를 띠고 있다. 1998년 5,000가구와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처음 자료가 수집되었고 2009년에는 표본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1,415가구가 새롭게 표본으로 추가되었다.

한국노동패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가구용 자료는 가구원의 인적 사항이나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주거상태, 자녀의 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 부채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반면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및 소득 활동, 소비, 교육,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 대상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가구원들에 대한 조사가 개인용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용 자료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가중치를 가구와 개인에 대해서 다르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개인 가중치를 사용하여 대표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개인에 대한 가중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분석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소득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가 가구와 개인으로 구분되므로 소득도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으로 구분된다. 가구 소득은 기본적으로 '작년 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 소득은 각 소득항목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항목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근로소득은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의미하나 한국노동패널의 근로소득에는 자영업자의 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즉, 가구주의 종사자상의 지위에 따라 근로소득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의 개념을 넘어설 수 있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의미하며 예금의 이자소득이나 주식의 배당금, 채권이자, 주식 매매차익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자산가치가 변하였어도 실제 매매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나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을 포함한다.¹²⁾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 수급액을 통칭하는 사회보험이 있다. 이전소득은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을 모두 포함하나 재해나 재난 등으로 1회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은 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편입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보험금이나 퇴직금과 같이 1회적으로 받은 소득들을 통칭한다. 개인 소득은 주된 일자리¹³⁾를 기준으로 구성된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 내용은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된 임금이 월급여이다.

한국노동패널 소득 자료에서 중요한 사항은 모든 가구 소득이 세후소득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모든 가구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의 경

12)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주된 일자리는 취업자가 응답한 유형 설문문의 내용 중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일자리 관련 변수이다. 취업자가 1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주된 일자리'라고 명시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우 항목별 가구소득을 모두 합한 가구소득은 개념적으로 가계동향조사의 가처분소득에 일치한다. 개인 자료에서 제공되는 월평균 급여도 역시 세후 소득이다. 따라서 세전소득을 제공하는 여타의 자료들과 직접 비교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한국노동패널의 소득 관련 통계를 이해할 때는 세후소득임을 감안해야 한다.

다. 재정패널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패널자료라면 재정패널은 제도 수립·변경 전에 관련 제도의 변화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이다. 즉, 조세 및 복지정책이 가계의 소득 재분배나 후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자산과 소득, 소비지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가계동향조사나 한국노동패널과는 달리 2008년부터 구축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 혜택을 파악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타의 다른 가구 자료와 마찬가지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에 대해서 수집을 한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가계지출 현황에 대해서 월평균 지출과 연간 지출 총액 등을 파악한다. 그밖에 개인이전지출과 이전소득 복지현황, 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소득에 대한 자료는 앞서 살펴본 가계동향조사나 한국노동패널과는 달리 가구 단위로 수집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가구원) 단위에서 소득을 파악하고 가구 소득은 각 가구의 가구원들의 소득 총합으로 직접 계산을 해야 얻을 수 있다. 소득은 연간단위로 파악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근로소득은 기본급과 보너스, 수당 등 직장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일컫는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와 순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데, 순소득은 총매출 중에서 경영을 위한 일반관리비와 같은 비용을 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매출액이 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순소득은 없는 것으로 표기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건물이나 주택, 토지 등을 임대해준 대가로 받은 월세나 임대소득으로 정의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이자수입이나 배당소득이 연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기타 소득은 차수별로 정의가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이전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패널 수집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연금이나 보험 관련 지출 현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소득세 유형과 소득공제 현황 등에 대해서 개인수준에서 자세하게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재정패널 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모든 소득을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소득을 제외하고, 가계동향조사나 재정패널, 한국노동패널 개인자료의 월평균 임금은 모두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지금까지 살펴본 가계동향조사나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은 모두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구축된 가구 자료(household data)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살펴볼 자료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사업체 데이터(establishment data)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피고용자들의 개별 인적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여 경제정책과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된 자료이다. 1968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최초 통계가 작성된 이래 두번에 걸쳐서 조사대상의 범위가 변경되었다. 우선 1970년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에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2년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2008년 6월까지 통계가 작성되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고용정책과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 피고용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002년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되었으나 2008년에 명칭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통합하여 현재까지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부터 2008년까지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미시자료를 활용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미시자료를 연결하여 분석한다.

이 자료도 가계동향조사와 같이 조사 대상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조사 대상 범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 1999년 조사대상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행히 사업체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조사 대상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사업체 규모에 대한 정보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5~9인 규모와 10~29인 규모로 분리해서 제공되었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도 2011년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사업체 규모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10인 이하 상용근로자 사업체로 통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사업체 규모가 5인 미만과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으로 분류되면서 10인 미만의 사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인 미만의 사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한 후 해당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일정 부분을 임의추출한다.¹⁴⁾ 선택된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과 근로시간, 급여와 같은 정보들을 임금대장을 통해서 수집한다. 가구 조사 자료는 실제 가구원에게 임금이나 소득수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질문하여 기입하기 때문에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사업체 자료는 측정오차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4) 예를 들어 1999년의 경우 5~99인 규모는 근로자를 전수조사하고, 100~299인 규모는 80%, 300~499인은 70%, 500~999인은 50%, 1,000~4,999인은 30%, 5,000~9,999인은 20%, 10,000인 이상은 10%를 추출한다.

급여(소득)에 대한 정의나 분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동일하다. 급여는 해당연도 6월의 월급여이고, 전년도 연간상여금과 성과급 총액은 별도로 제공된다. 월급여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로 나뉜다. 정액급여는 근로계약, 근로협약,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지급액, 지급조건, 산정방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초과급여는 정상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로 인해 추가되는 급여로 정의되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연간특별급여액은 급여지급 관계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의미하며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연간특별급여액은 전년도 연간상여금과 성과급 총액의 합이다. 앞에서 살펴본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은 근로소득이 월단위로 제공되고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역시 월급여는 월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나 특별급여액은 연단위로 지급되고 있다.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연간특별급여액은 12로 나누어 월급여액과 합하여 월평균 근로소득을 구성한다.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임금에 대한 세전, 세후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월급들의 구성형태를 볼 때, 임금 대장에 기입된 근로자 1인당 지급된 소득이기 때문에 세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자료 간 특성 비교

앞에서 살펴본 4가지 자료를 몇 가지 특성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은 가구 자료로 분류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 조사로 구분된다. 사업체 조사는 가구 단위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소비, 자산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회고적 방법에 의해서 작성되는 가구 조사보다 측정오차가 적고 표본 수가 많기 때문에 성별이나 학력별, 연령별 임금 격차를 분석하기에 더 적합한 자료이다. 조사 대상과 관련이 있는 조사 대상의 수준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구단위 조사와 가구원 혹은 개인단위 조사

로 구분이 된다. 가계동향조사가 가구 단위 조사인 반면 한국노동패널이나 재정패널은 가구와 개인 단위 조사이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개인 단위 조사이다. 소득에 한정지어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도 가구 소득과 가구원 소득을 모두 제공하기는 한다. 하지만 가구원 소득은 가구주와 배우자, 기타가구원 전체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개인 단위까지 제공되는 소득 자료는 아니다. 개인 자료로 활용이 어려운 더 큰 문제는 가구 수준의 가중치만 제공하지 개인 수준의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은 가구원 수준의 소득을 따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구 가중치와는 별도로 개인 가중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수준의 자료이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구 단위로 분석할 것이냐 개인 단위로 분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자료가 달라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를 통해 측정된 소득 불평등 지표들을 분석할 때, 분석 단위가 가구인지 개인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료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가계동향조사¹⁵⁾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인 반면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은 패널 자료이다. 패널 자료는 한 개인이나 가구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시간(혹은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이나 가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에 관한 분석에서는 소득 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unobserved productivity) 등을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잔차(residual) 부분을 개별 생산성에 대한 충격(idiosyncratic shock)과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unobserved productivity) 부분으로 분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

15)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된 미시자료(micro data)는 패널 구축이 가능한 가구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패널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횡단면 자료 분석만 가능하다. 하지만 통계청 내부 자료를 활용하면 5년간 동일 가구 및 개인별 패널 자료 생성이 가능하다. 김혜련(2010)은 가계동향조사가 매 5년마다 표본을 개편하기 때문에 가구식별번호가 제대로 제공된다면 표본이 바뀌기 전 5년 동안 패널 자료 구축이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점이 있다. 반면 패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초 선택된 표본 전체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패널 구성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표본의 대표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패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본 수를 많이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횡단면 조사는 일정한 시점과 방법에 따라서 표본을 바꾸면서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표본 수가 패널 자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자료들의 소득 정의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한다. 고용형태 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만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 정의에 대한 분류가 따로 필요 없다. 아래 표는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의 소득 정의에 따라 자료 간 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표 III-1〉 자료 간 소득 분류 비교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경상 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	기타소득 -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기타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세전소득

자료 :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코드집을 바탕으로 저자 비교

한국노동패널이 가계동향조사나 재정패널과 가장 다른 점은 근로소득을 다른 자료들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가구주의 종사자상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분석하고자 할 때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중

사자상의 지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 밖에 다른 소득을 살펴보면, 가계동향조사에서 재산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은 한국노동패널이나 재정패널에서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전소득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은 공적연금과 각종 사회보험수급(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같은 소득은 사회보험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이전소득으로 통합되어 있는 반면, 재정패널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분류 아래 모두 모아져 있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비경상소득은 1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되는데, 한국노동패널에서도 유사한 개념으로 기타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패널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기타 소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자료들 간의 특성을 비교해서 정리한 표이다.

〈표 Ⅲ-2〉 자료 간 특성 비교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 년도	1963년~현재	1998년~현재	2008년~현재	1968년~2008년	2002년~현재
조사 목적	국민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 측정 및 분석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	관련제도의 변화가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정책과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고용 관련 정책 개발 및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파악
대상	가구	가구/개인	가구/개인	사업체(개인)	사업체(개인)
기준	조사대상월 기준	전년도 소득 기준	전년도 기준	해당연도 6월 기준	
단위	연간 월평균	월단위	연단위	월단위	월단위
자료 형태	횡단면	패널	패널	횡단면	횡단면
장점	- 표본의 대표성 유지 - 표본수가 많아 성별·학력별· 연령별 임금격 차 분석에 적합	- 시간(혹은 생애 주기에 따른 개 인이나 가구의 변화 파악 가능	- 고소득층과 저 소득층 가구 과대표집 - 시간(혹은 생애 주기에 따른 개인이나 가구 의 변화 파악이 가능	- 표본수가 많아 성별·학력별·연 령별 임금격차 분석에 적합 - 표본의 대표성 유지 - 측정오차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표 III-2〉의 계속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단점	- 분류체계 변화로 인한 시계열의 단절성	- 패널 구성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표본의 대표성이 상실될 가능성 - 패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본 수를 많이 할 수 없음	- 패널 구성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표본의 대표성이 상실될 가능성 - 패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본 수를 많이 할 수 없음	- 가구 단위에서 나타는 소득과 소비, 자산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함	
가중치	가구 가중치	개인 가중치/ 가구 가중치	개인 가중치/ 가구 가중치	개인 가중치	
소득 종류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사회보험 - 이전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및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기타소득	- 임금만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정의 분류가 필요하지 않음 - 월급여(정액급여/초과급여) - 연간특별급여(연간상여금/성과급)	
세전/ 세후	세전	세후	세전	세전	
기타	- 명칭 변경 · 도시가계조사 (~2002) · 가계조사 (2003~2007) · 가계동향조사 (2008~) - 분류체계 개편 · 신분류(2009년 이후) → 2인 이상 도시 (1990~2008) → 2인 이상 전국 (2003~2008) → 1인 이상 도시 및 전국(2009 ~ 현재) · 구분류(2008년 이전) → 2인 이상 도시 (1982~2008) → 2인 이상 전국 (2003~2008)	- 자영업자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어 중사상지위에 대한 통제가 필요 - 개인/가구 자료가 구분되어 제공	- 과세자료 수집 - 가구 소득은 각 가구의 가구원들의 소득 총합으로 직접 계산을 해야함	- 1992년에 직종별임금실태조사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 명칭 변경 - 2008년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통합 - 연도마다 조사 대상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함	

자료: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코드집을 바탕으로 저자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자료는 조사대상과 수준,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표를 제공하더라도 해석을 할 때 유의해야 한다. 소득에 대한 정의 역시 자료마다 포괄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 관련된 지표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정의가 가장 명확하게 되어 자료 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 변수 구성에서 설명한다.

2. 변수 구성 및 표본 선택

본 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각종 변수들을 구성하는 방법과 표본 선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에 앞서 먼저 분석단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가구 자료는 기본적으로 분석단위가 가구이다. 하지만 사업체 자료는 개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료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의 경우 개인 단위의 자료와 개인 가중치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분석단위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개인 단위 분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주만을 가지고 개인 단위로 구성하여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구성 방법과 표본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변수구성

변수는 크게 개인 인적 사항과 관련된 변수와 근로소득에 관한 변수로 구분된다. 인적사항은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근로소득에 관한 변수는 월급여 임금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 인적 사항

개인의 성별은 명확히 제공된다. 연령은 기본적으로 출생연도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으로 구성한다. 출생연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제공되는 연령을 사용한다. 학력에 대한 정보는 자료마다 상이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학력 구분은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등 4가지로 한다. 자료마다 학력 구분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한 자료 안에서도 시점에 따라 학력 변수들이 변화한다. 이를 통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모든 자료에 적용하여 학력 변수를 구성한다.

〈표 III-3〉 학력 구분 구성 방법

구분	학력변수	학력구분	평균 학력수준	설 명
고졸미만	1	<12	9년	초졸, 중졸, 고등학교 재학 혹은 중퇴
고졸	2	=12	12년	고졸, 전문대 재학/중퇴, 대학 재학/중퇴
전문대졸	3	(12,16)	14년	전문대졸
대졸	4	=16	16년	대졸, 대학원 재학/중퇴
대학원졸	5	>16	18년	대학원졸

자료: 저자 작성

학력에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료에서 학력 수준과 수학 여부를 구분하여 제공한다. 학력 수준은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혹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으로 구분된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초등, 중등, 고등의 구분이 고등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대학원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수학 여부는 기본적으로 재학, 졸업, 중퇴로 구분된다. 이 두 변수를 결합하여 고졸 미만인 경우는 고등 이하 학력 중 졸업자를 제외, 고졸은 고등학력과 졸업, 전문대졸은 전문대졸업자와 4년제 대학 중 재학 또는 중퇴, 대졸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분류한다.

(2) 급여 변수

일반적으로 임금 분포(wage distribution)를 분석할 때는 시간당 임금을

사용한다. 연간 근로소득과 같이 노동공급 변수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노동공급에 의해서 노동생산성의 올바른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 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마다 노동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통제하기 위해서 Krueger et al.(2010)에서도 시간당 임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존재해야 된다. 각 자료별 근로시간 관련 변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노동공급에 관한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소득 자료는 시간당 임금으로의 환산이 불가능하다.¹⁶⁾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에서는 가계동향조사보다는 노동공급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는 있지만 시간당 임금을 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주된 일자리에 대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하지만 근로 주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급여나 월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근로 주수에 대해서 52주나 4주와 같이 가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

16) 가계동향조사에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와 같은 노동공급과 관련된 변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모집단에서 같은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두 자료 간에 공통의 가구식별번호를 사용한다면 기술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실제로 김혜련(2010)에서는 통계청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동향조사 월별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이처럼 두 자료 간의 결합이 가능하다면 가계동향조사가 갖추고 있지 못한 노동공급에 대한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갖추고 있지 못한 임금에 대한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고 외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Basic CPS는 노동시장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상태와 실업기간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표본 중 일부(rotation number가 4와 8인 경우)에 대해서만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패널을 구축할 경우 노동시장 활동(labor market activity)에 대한 패널정보는 제공되나 임금에 대한 패널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urvey of Income Participation Programm(SIPP) 자료는 노동시장활동과 임금 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모두 수집한다.)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연결이 된 미시자료가 공개가 된다면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분석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있다. 입직(job finding)과 이직(job separation)이 주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월간 근로 주수를 4주로 가정하여 시간당 임금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연간의 경우 실업기간이 언제든지 일정기간 이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근로 주수에 대해서 52주로 가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이는 총근로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extensive margin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측정해서 사용하는 의미 자체를 잃었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도 시간당 임금을 측정하는 데 제약이 있다. 재정패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총합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근로 주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에서는 시간당 임금 측정이 가능하다. 우선, 모든 표본들이 조사 기간인 6월 동안 고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 주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이 자료에서는 월간 근로일수¹⁷⁾와 월간 누적 근로시간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시간당 임금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료들 간의 일관성 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급여의 시간단위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시간당 임금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당 임금 대신 대부분의 연구에서 측정이 가능한 월급여를 임금 단위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월근로소득으로 환산된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근로소득은 월단위 환산이 불가능하지만, 개인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평균 임금은 월급여의 개념에 부합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임금 자료 자체가 월급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재정패널은 연간 근로소득만을 제공하고 근로 주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간 근로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월급여로 사용한다. 따

17) 근로일수 같은 경우는 휴일실근로일수를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일수를 파악할 수 있다.

라서 재정패널의 결과는 노동공급이 통제가 되지 않은 임금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명목과 실질변수와 관련된 사항이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실질변수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에는 명목변수가 더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목과 실질 결과를 상황에 맞게 제공하고자 한다. 대신 명목과 실질에 대한 구분 표기를 확실히 하도록 한다. 실질변수로의 환산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한다.

나. 표본선택

표본선택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이 단계의 표본선택은 각 자료들이 국민계정 자료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단계의 표본선택은 연령을 만 25세~60세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본선택은 분석 대상을 근로 가능인구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격차를 비롯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두 번째 단계의 표본선택을 거친 자료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표본선택 방법은 RED2010의 방법을 적용한 것인데, 이로써 추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앞으로 사용될 4가지 자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구성하는 방법과 표본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가구 자료인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과 사업체 자료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종 인적 사항에 관련된 변수들을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변수는 월(평균) 급여로 구성하여 사용한다.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표본선택은 자료들의 정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민계정과 비교에 사용된다. 본격적인 분석에서는 근로가능 인구인 만 25세~60세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IV. 자료 간 정합성 비교

본격적인 근로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 간의 정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⁸⁾ 앞 장의 자료설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자료들의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본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각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 특성들에 대해서 인적 구성 측면과 근로소득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적 구성은 가구 자료들이 모집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인적 구성과 비교한다. 근로소득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서 제공하는 피용자보수를 기준으로 각 자료들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을 비교한다.

1. 인적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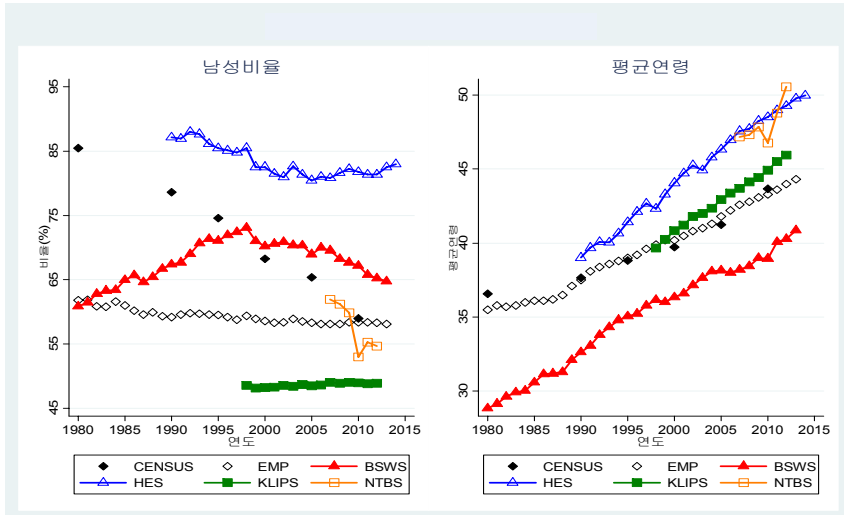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기에 앞서 각 자료들의 인적 구성에서 대해서 살펴본다. 인적 구성에 대한 준거 자료로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CENSUS)와 경제활동인구(EMP)를 활용한다. 소득을 근로소득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적 구성의 비교 대상 역시 종사자상의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해서 설정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인적사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 한해서 인적 구성을 구축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보다 더 포괄적인 취업자를 기준으로 인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가 포함된 자료임을 감안해야 된다.

18) 이하 제공되는 그림과 표에서는 각 자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BSWS, 가계동향조사 - HES, 한국노동패널 - KLIPS, 재정패널 - NTBS

먼저 성비와 평균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래 [그림 VI-1]의 왼쪽 패널은 각 자료들로부터 얻은 성비를 제공하고 오른쪽 패널은 평균 연령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 자료 간 성비와 연령 비교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인구주택총조사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은 1980년 8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60%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의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자간의 간격은 지속적으로 좁혀져서 2010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취업자 수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70%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¹⁹⁾

19)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에 대한 추세는 [부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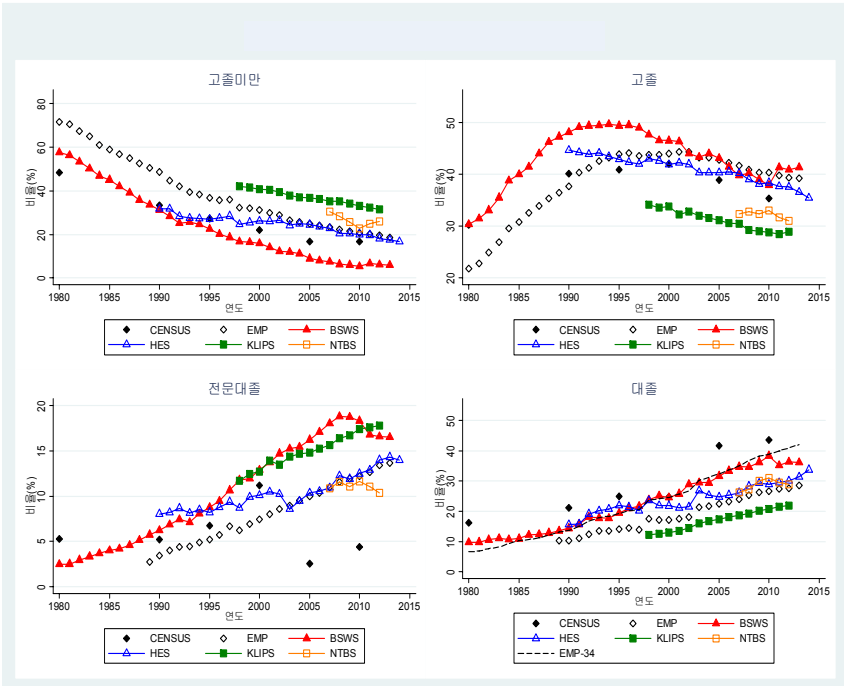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남성비율 추세는 인구주택총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수준과 추세 측면에서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가계동향조사(HES)의 경우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만 수준 측면에서 여타의 자료들보다 월등히 높아 평균 8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노동패널(KLIPS)은 오히려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재정패널(NTBS)은 남성비율이 2010년에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BSWS)의 경우 다른 자료들과는 매우 다른 역U자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1998년 외환위기까지 남성비율이 증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Han(2014)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이직률(job separation rate)은 수준 측면에서 남성이 더 높으나 추세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전후로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 남녀 간의 차이가 없던 입직률(job finding rate)이 외환위기 이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입직률의 변화가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에서 여성비율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연령은 자료 간 수준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든 자료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로 한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자료들보다 높은 평균 연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추세는 유사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보다 평균 5세 정도 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젊은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10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에서 보이고 있는 패턴들의 원인에 대해 직접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후추 연구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그림 IV-2] 자료 간 학력 구성비 비교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다음은 자료 간 학력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졸 미만, 고졸, 대졸, 전문대졸 순으로 비교하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고졸 미만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졸자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1990년대 중반에 정체기를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전후로 대졸자의 입직률(job finding rate)과 이직률(job separation rate)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고졸자는 이직률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Han, 2014). 학력 구성비는 모든 자료들이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긴 시계열에서 가장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2.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 비교

자료 간 근로소득의 비교는 국민계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용자보수의 임금 및 급여 부분(이하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과 비교한다. 이와 같은 비교의 목적은 각 자료들이 과연 근로소득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김낙년(2012b)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 자료의 근로자와 근로소득 범위를 비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자료들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근로소득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낙년(2012b)은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 중 임금 및 급여를 기준으로 해당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가 포괄하는 소득범위를 비교하고 있다. 근로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의 총액과 포괄하는 자료의 취업자 총수를 통해서 각 자료들의 대표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들이 제공하는 가중치의 크기가 모집단의 크기와 같아져야지만 비교가 가능하다. 표본 전체의 평균값이나 분포를 파악할 때는 확률분포가 동일하면 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김낙년(2012b)과 같이 단년도(2010년도)만 비교하는 경우는 총액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계열로 분석을 하는 경우 한 자료 내에서도 조사 범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액 기준 대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함으로써 각 자료 간 정합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1인당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와 비교하는 방식은 RED2010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합성 확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1인당 소득 비교를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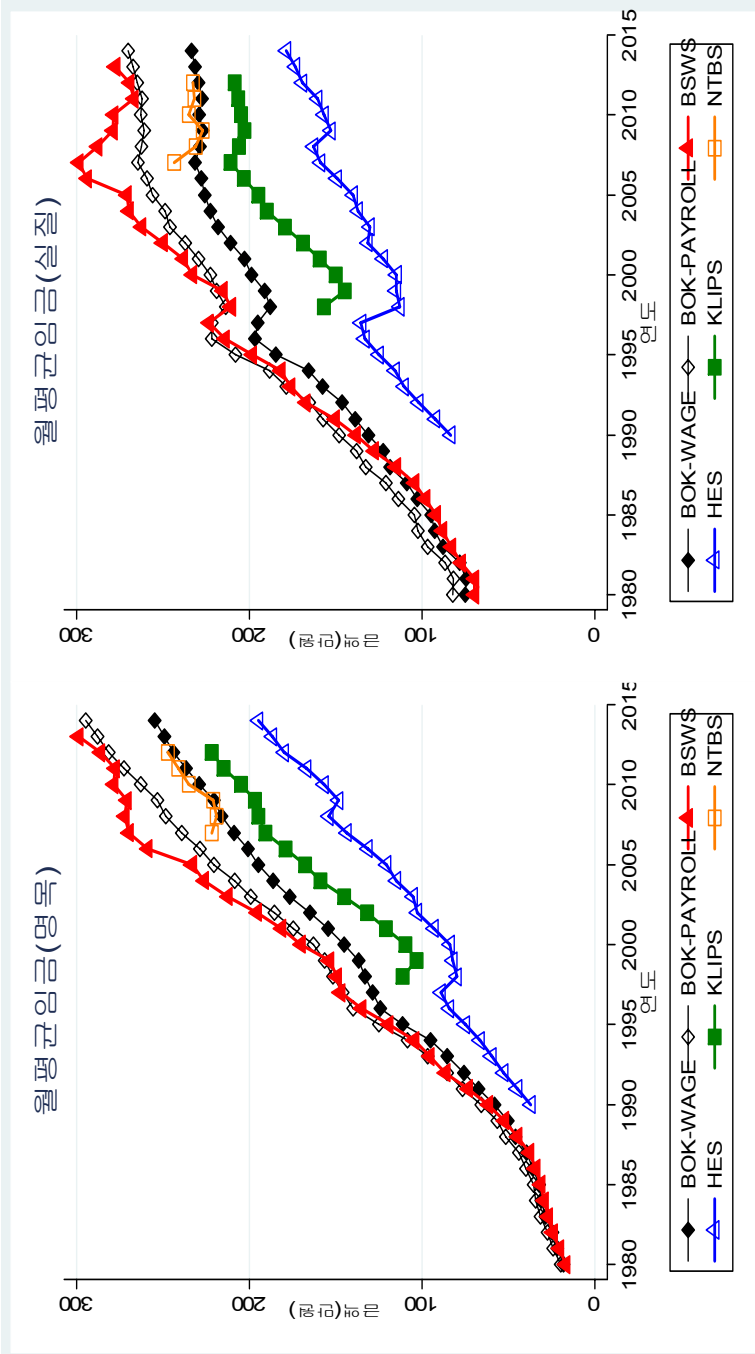
먼저,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의 1인당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에 앞서 피용자보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2010)에 따르면 피용자보수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기업이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의 보상 총액”으로 정의된다. 피용자보수는 노동대가의 지급시

기와 상관없이 회계기간 중에 이루어진 노동에 대한 보상액을 기록한 것이다. 비법인기업의 소유주인 가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무급노동은 피용자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피용자보수는 임금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근로소득 개념과 일치한다. 피용자보수는 임금 및 급여와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들어 가지만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되는 근로소득은 임금 및 급여로 한정해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1차적인 준거 대상은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를 활용하고 피용자보수 역시 비교를 위해서 같이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를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분석 자료들에서 사용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자 한 명의 월급여이다. 따라서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는 1인당으로의 환산과 월급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1인당으로의 전환은 임금 및 급여를 총임금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²¹⁾ 월급여로의 환산은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12개월로 나눈다.

2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취업자 수와 임금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는 [부록]을 참고 하길 바란다.

[그림 IV-3] 자료 간 1인당 월평균 임금 비교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위 그림은 국민계정 피용자보수와 임금 및 급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1인당 월급여를 각 자료들이 허락하는 기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왼쪽 패널은 명목으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패널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피용자보수와 임금 및 급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양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한국에 사회보장제도 개념이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이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피용자보수와 임금 및 급여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고용주 부담금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표 IV-1〉 명목표시 평균 월급여 자료 간 비교

(명목표시, 단위: 만원)

	국민계정		BSWS	HES	KLIPS	NTBS
	피용자보수	임금및급여				
'80	20.0	18.2	17.0	-	-	-
'85	35.8	32.4	31.4	-	-	-
'90	65.9	58.3	61.6	37.2	-	-
'95	125.1	111.3	119.5	75.3	-	-
'00	162.8	145.2	170.3	83.9	109.6	-
'05	220.5	194.7	233.3	120.5	167.6	-
'07	239.0	209.0	269.8	143.6	190.6	221.6
'08	248.2	216.2	272.2	154.1	194.8	219.0
'09	253.4	220.6	271.0	148.4	196.9	220.9
'10	262.9	229.0	278.5	157.0	204.8	235.0
'11	272.7	236.7	277.7	167.0	214.9	241.3
'12	281.5	243.8	286.1	179.9	221.7	247.2
'13	287.8	249.2	298.9	186.7	-	-

자료: 국민계정,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각각의 자료를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는 1980년대 후반까지 임금 및 급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1990년대 초반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월급여가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나게 된다. 개인의 특성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기업규모와 임금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정형화된 사실에 비춰볼 때, 10인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측정하고 있는 피용자보수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1990년대 초반부터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990년 이전에는 10인 미만의 상용직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체가 많지 않았거나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1990년대 이후 국민계정 임금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아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임금 구조가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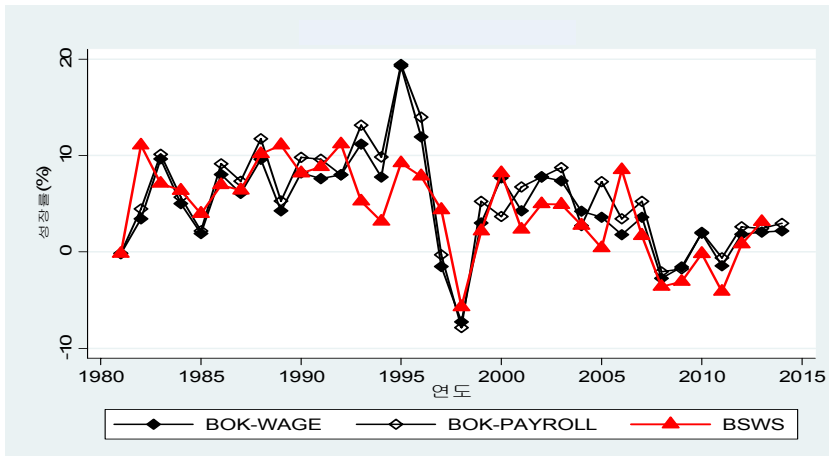
재정패널은 비록 시계열은 짧지만 월급여가 국민계정 임금과 유사한 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재정패널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가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판단된다. 한국노동패널 월급여의 경우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 수준보다 명목 기준으로 평균 26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노동패널 월급여가 세후 자료이기 때문이다.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를 세전소득, 한국노동패널 월급여를 세후소득으로 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9.7%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국세청 연말정산 근로소득²²⁾의 실효세율 평균 4.6%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노동패널이 세후소득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월급여가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보다 월등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계정과 명목 기준으로 평균 54만원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 가구주의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더욱 특이한 결과이다. 가계동향조사는 다른 자료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높다. 반면 고졸 미만이나 고졸 학력이 낮게 나타나고 전문대졸이나 대졸 비율은 다른 자료와 큰 차이가 없

22) 김상조(2014) p.11 〈표 1-1〉의 수치를 활용하였다.

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인적 사항에 대한 보상률이 높은 특성들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수준이 다른 자료보다 높아야 뭍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현재까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계동향조사가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이 되었고, 가구에 대한 가중치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²³⁾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를 개인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근로소득의 경기 변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질임금 성장률을 계산해서 비교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1인당 실질임금 성장률을 국민계정 피용자보수와 임금 및 월급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²⁴⁾

[그림 IV-4] 1인당 실질임금 성장률



자료: 국민계정,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3) 이를 보다 엄밀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결합한 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가중치를 활용하여 통계량을 다시 계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은 한국노동패널이나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통계량을 계산할 때 개인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통계량도 다른 자료들과 많이 차이가 난다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해서 재고해 보아야 된다.

24) 실질임금 성장률은 이번 기 실질임금을 전기 실질임금으로 나눈 후 1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시계열을 가장 길게 확보할 수 있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가지고 분석했다.

1979년부터 1980년까지 2차 석유파동의 결과 1981년 실질임금 성장률이 0%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수출호조로 실질임금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1998년 외환위기로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한다.²⁵⁾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5% 정도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금성장률이 0% 밑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로 실질임금 성장률이 다시 한 번 하락한 후 현재는 3%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질임금 성장률은 경기변동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과 같은 큰 위기를 겪고 난 후 실질임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 명목임금, 실질임금, 실질임금 성장률 비교(5년간 평균)

(단위: 만원, %)

연도	월급여 수준(명목)			월급여 성장률(실질)		
	PAYROLL	WAGE	BSWS	RGDP	WAGE	BSWS
'80~'84	27.45	24.92	23.73	9.4	4.48	6.09
'85~'89	45.54	40.87	40.19	10.5	5.97	7.71
'90~'94	86.70	76.50	84.34	8.4	8.56	7.32
'95~'99	143.90	126.83	141.07	5.7	5.09	3.58
'00~'04	186.05	165.49	197.11	4.8	6.28	4.63
'05~'09	237.90	208.21	261.02	4.1	0.94	0.78
'10~'14	279.90	242.70	285.32	3.0	1.30	-0.09

자료: 국민계정,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위의 표는 월급여 수준과 성장률을 5년 간격으로 평균을 낸 것이다. 월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서 월급여 성장률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7~8%의 높은 임금성장률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5%대로 추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25) 이와 같은 모습은 [그림 IV-3]의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는 0%대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질 GDP 성장률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실질 GDP 성장률과 실질임금 성장률 간의 간극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임금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와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뿐만 아니라 성장률과 임금 상승률 간의 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여부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Han(2015)에 따르면 피용자보수로만 측정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중간재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적어 상호보완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노동 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생산함수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소결

지금까지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그리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인적 구성과 평균 월급여를 비교하였다. 먼저, 임금근로자들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들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속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자료들이 보이는 남성 비중은 추세와 수준이 모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와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반면 평균 연령은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추세적으로는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학력 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졸 미만은 감소, 고졸은 증가하

2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10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다시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상승률이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중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경제 전체 임금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기에 때문에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놓는다.

다 감소하는 추세, 전문대졸과 대졸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이다.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도 가능한 자료기간에서는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시계열이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각 자료의 1인당 평균 월급여를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와 비교한 결과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전체적인 추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역시 조사 기간 안에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임금 감소 등과 같은 패턴을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수준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 규모가 일정 수준보다 큰 규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계정 임금 및 급여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 재정패널은 매우 비슷한 수준을 잘 따르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세후소득임을 감안하면 국민계정에서 나타나는 평균급여 수준보다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평균 월급여가 54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가구가중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 이와는 다른 문제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각 자료들은 자료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소득 분포의 동태적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는 각기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가계동향조사나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과 같은 가구 자료들은 긴 시계열 자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은 자료가 구축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시작 시점에서부터 시계열을 구축하면 이론적으로는 매우 긴 시계열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범위와 분류 기준 등이 달라지면서 일관된 시계열은 1990년부터 시작된다. 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미시자료 중에서는 가장 긴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범위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한계를 가진다. 가장 긴 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로 대상을 한정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계동향조사도 도시 가구 중 2인 이상 가구로만 조사 대상이 한정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하지만 패널 표본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 조사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가장 작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세후소득만을 제공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생산성 관점에서 보면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직접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임금 프리미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가계동향조사나 재정패널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는 자유로우나 노동시간에 관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 부분을 완전히 통제할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시자료들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 소득자료는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원천징수를 바탕으로 작성된 소득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없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00분위 단위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 미시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 소득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분명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상의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별 간, 연령 간, 혹은 학력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전체 소득 불평등 중에서 개별 생산성 충격(idiosyncratic productivity shock)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등으로의 요인분해 등과 같은 분석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자료들은 근로소득으로 한정해서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특정

자료만을 가지고 소득 불평등을 제공하는 대신 4가지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시점에 대한 횡단면 분석보다는 전체 분포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시계열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가장 긴 시계열과 많은 표본 수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4가지 자료의 결과를 모두 제공하고 비교하지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한국의 소득 불평등 변화를 분석하는 데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Ⅵ장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RED2010의 표본 선택에 따라 연령을 25세에서 60세로 한정해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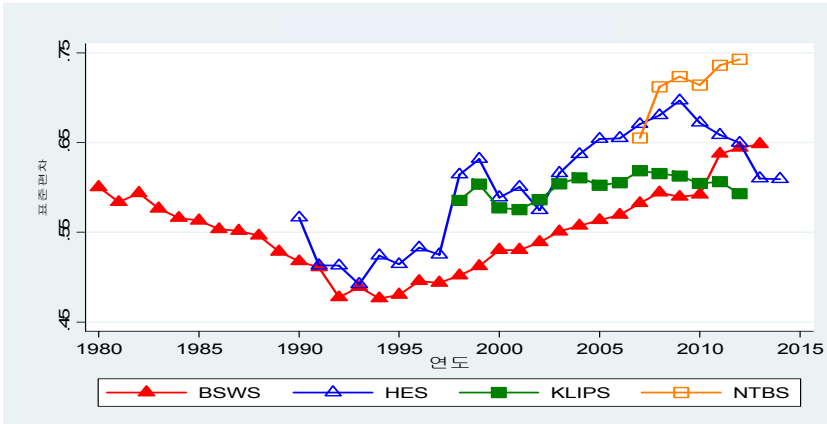
V.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소득 전체의 분포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불평등도가 지난 4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성별 혹은 연령, 학력과 같이 관측되는 부분들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지난 40년간 어떤 추세로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임금 격차의 변화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그 임금방정식을 추정한 후 얻는 잔차의 분포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잔차 부분은 개인의 변하지 않는 특성 부분인 고정효과 부분과 개별 생산성 충격(idiosyncratic productivity shock)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고정효과 부분에 대한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면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개별 생산성 충격 부분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이 변화해온 추세를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본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전체 근로소득 불평등

근로소득 전체의 불평등은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와 GINI 계수, 90/10 분위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그림 V-1] 소득 불평등: 표준편차 - 로그실질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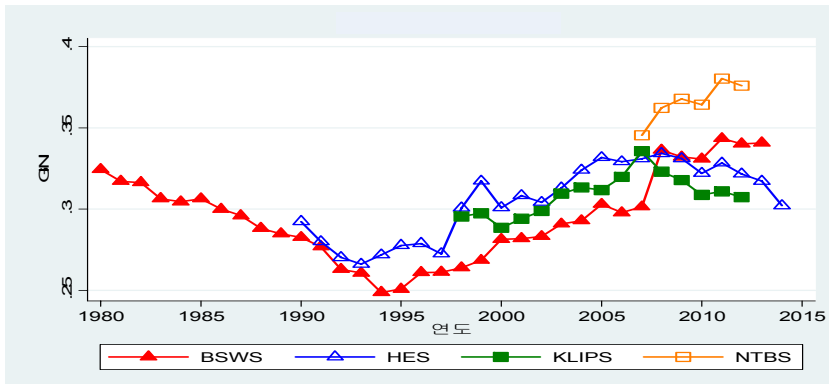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위 그림은 각 자료의 실질 월급여에 로그를 취한 값의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을 제외하고는 1995년 이후 표준편차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표준편차의 추세가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재정패널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계동향조사의 표준편차는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여타의 결과들과는 달리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임금이 세후소득임을 상기하면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일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만 가지고 재분배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한국노동패널의 소득자료 내에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자료 간에 발생하는 오차를 수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근로소득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결과를 전체 소득 재분배의 역할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후근로소득임을 감안할 때, 소득재분배 기능 중 조세의 역할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큰 축인 재정지출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조세와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Chang, Chang and

Kim(2015)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체 소득을 중심으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GINI 계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재분배 기능은 전체 OECD 국가 중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재분배 기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²⁷⁾²⁸⁾

1995년 이후의 시계열을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긴 시계열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1995년을 기준으로 V자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1980년대에는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경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를 겪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들이 필요하다.

[그림 V-2] 소득 불평등: GINI - 실질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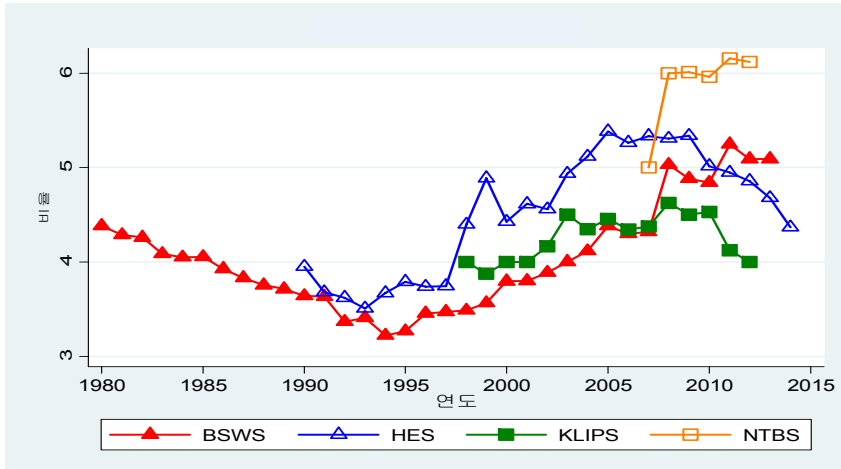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27) 소득재분배 기능은 조세 측면과 재정지출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결과를 의미한다. OECD 결과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세와 지출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28) 본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의 자료가 세후소득임을 강조하는 것은 재분배 기능과는 무관하다. 우선, 여타의 자료보다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게 나온 원인으로 세후소득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노동패널의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노동생산성 충격(idiosyncratic productivity shock)을 측정할 때, 세후소득임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와 같은 추세는 GINI 계수나 90/10 분위 비율과 같은 다른 불평등 지표에서도 관찰된다. 그리고 최근 2010년에 들어서 불평등 지수의 하락추세는 가계동향조사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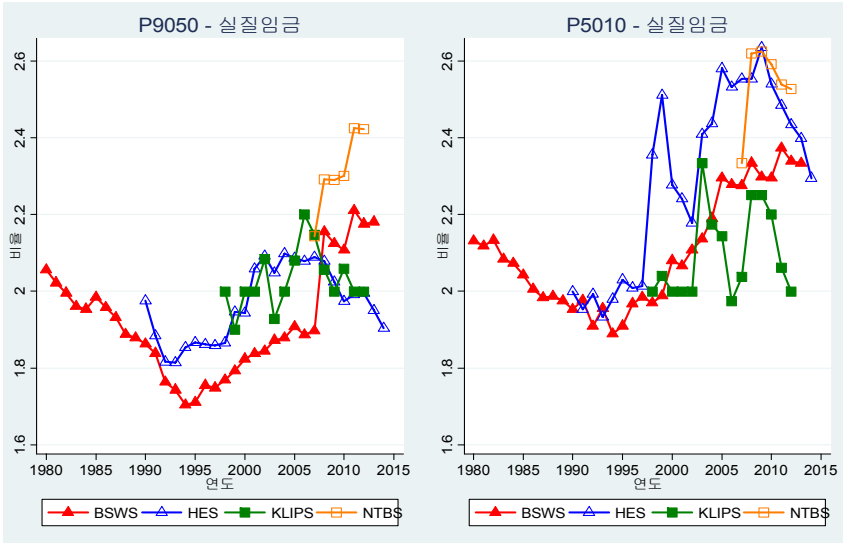
[그림 V-3] 소득 불평등: P9010 - 실질임금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90/10 분위 비율은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임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지표를 50분위를 기준으로 분해하면 전체 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상위 그룹에서 나타나는지 하위 그룹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90/50 비율과 50/10 비율이다. 아래 그림의 좌측 패널은 90/50과 50/10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V-4] 소득 불평등 : P9050, P5010 - 실질임금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위 그림에 따르면 90/50과 50/10은 1995년 이후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50/10이 90/50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적인 근로소득 불평등의 증가(90/10 비율의 증가)가 상위 그룹보다는 하위 그룹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이다.²⁹⁾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는 90/10 비율의 증가가 90/50 비율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더 자세히 분석해서 최상위 1%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90/50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90/50 역시 다른 국가들처럼 증가하지만 50/10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아 중위 소득 이하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위 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29) 이와 관련된 국가 간 비교 분석은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2. 관측되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다음은 관측되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자료들이 개인에 대한 성별과 연령, 학력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 혹은 연령 간, 학력 간 임금격차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을 시작으로 연령과 학력 간 임금격차에 대해서 논의한다.

가. 성별 간 임금격차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기본적으로 매 기간의 여성 평균임금을 남성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의 연령 변화나 학력 구성의 변화에 의해서 평균임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구성 변화를 모두 포함하여 성별 간 임금격차는 어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평균을 비교한다. 이와 같이 단순평균을 비교하는 것은 국가 간 비교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³⁰⁾

〈표 V-1〉 명목표시 남녀별 평균 월급여

(명목표시, 단위: 만원)

연도	BSWS		HES		KLIPS		NTB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80	24.5	11.5	-	-	-	-	-	-
'85	41.4	22.0	-	-	-	-	-	-
'90	75.9	42.3	73.8	38.4	-	-	-	-
'95	141.1	86.2	142.4	77.8	-	-	-	-
'00	197.9	130.2	179.5	93.5	136.0	80.1	-	-
'05	273.0	175.7	248.9	135.0	211.6	123.3	-	-
'07	312.0	200.1	286.6	143.9	242.8	134.9	299.6	1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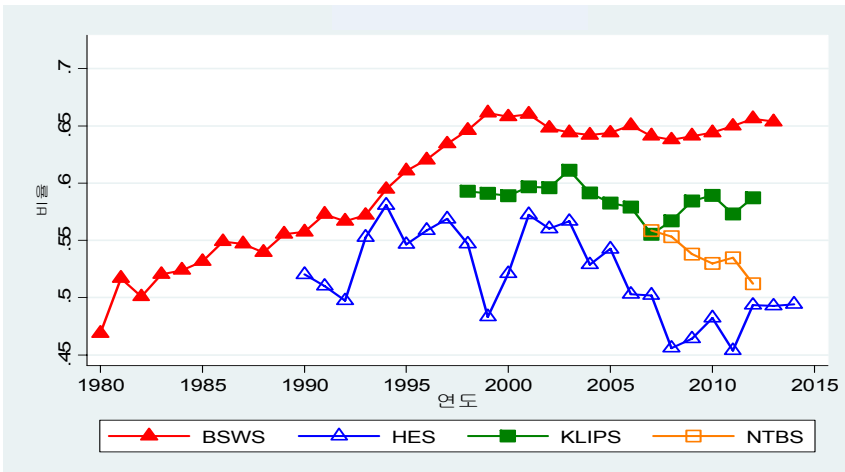
30) 다음 절에서 잔차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임금 방정식을 회귀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얻어진 여성터미에 대한 계수값과 단순평균으로 나온 임금격차를 비교하면 추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V-1〉의 계속

연도	BSWS		HES		KLIPS		NTBS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08	316.4	201.8	309.2	140.9	249.0	141.2	298.8	165.3
'09	315.3	202.2	301.1	139.7	249.7	146.0	303.0	163.0
'10	325.6	209.7	316.6	152.7	260.4	153.5	316.9	167.9
'11	329.6	214.3	337.9	153.3	279.1	160.0	329.4	176.1
'12	338.9	222.5	357.0	176.1	287.2	168.7	352.2	180.3
'13	356.7	233.2	360.6	177.7	-	-	-	-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V-5] 여성과 남성 간 임금 격차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위 그림에 나타나듯이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 수준이 감소해온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녀 간의 임금격차 감소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임금격차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여성 임금이 남성의 65%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김용성, 2007; 정진화, 2007; 김태홍, 2013)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임금격차의 분해 방법

에 따라 2000년 이후 정제된 남녀 임금격차의 수준이 63~80% 수준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남녀 임금격차의 감소 원인을 고학력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출에서 찾고 있다.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금격차 감소 추세가 정제되어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자료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학력 간 임금격차

다음으로 학력 간 임금격차를 살펴보도록 하자. 학력 간 임금격차는 고졸자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매 기간 대졸자의 평균월급을 고졸자의 평균월급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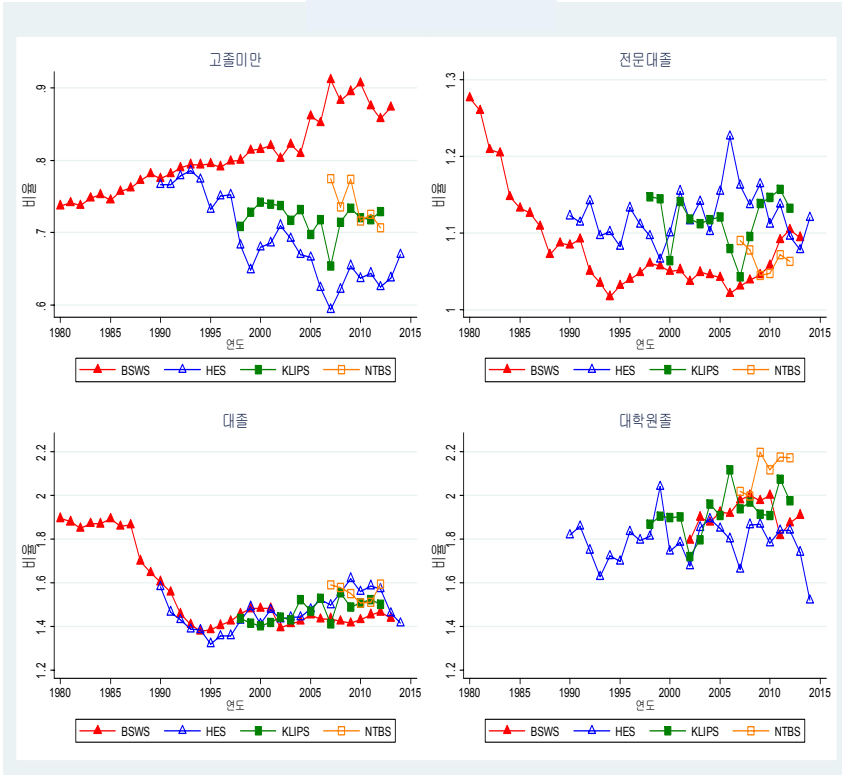
〈표 V-2〉 명목표시 학력별(고졸, 대졸) 평균 월급여

(명목표시, 단위: 만원)

연도	BSWS		HES		KLIPS		NTBS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80	22.0	41.6	-	-	-	-	-	-
'85	36.7	69.5	-	-	-	-	-	-
'90	66.5	106.8	67.9	107.5	-	-	-	-
'95	125.2	173.4	130.0	171.9	-	-	-	-
'00	163.8	243.1	156.8	221.5	111.3	156.1	-	-
'05	209.1	303.6	203.9	302.1	159.4	234.6	-	-
'07	235.7	338.5	230.5	345.7	183.5	259.4	205.0	326.1
'08	237.9	339.0	235.1	365.6	178.2	277.0	202.2	319.6
'09	234.8	332.3	224.3	363.6	177.6	264.6	200.2	310.4
'10	238.1	341.1	241.1	376.2	182.8	275.9	211.9	319.7
'11	243.2	353.8	248.6	394.4	190.2	289.6	216.2	326.6
'12	247.2	362.7	268.3	422.3	197.8	297.0	220.6	352.1
'13	260.6	375.0	281.2	411.1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V-6] 학력 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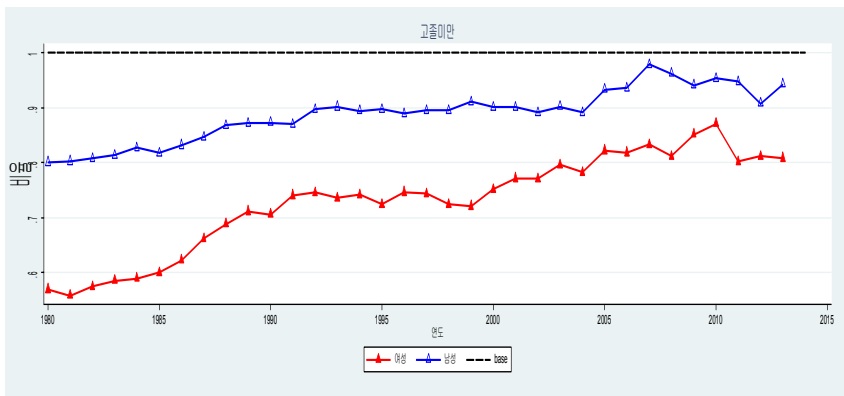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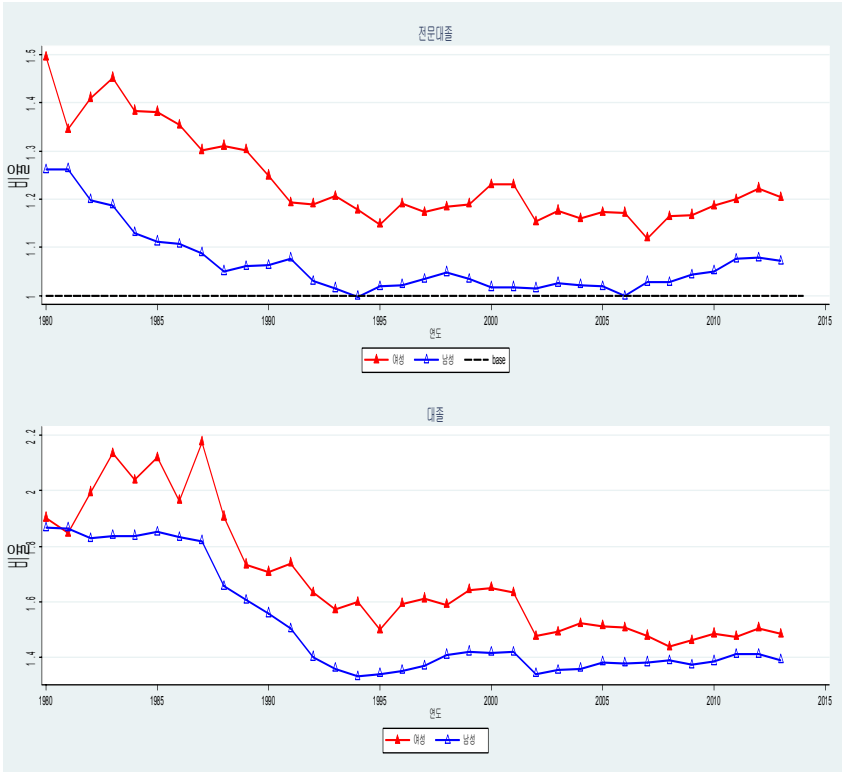
학력 간 임금격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서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전문대졸자와의 임금격차는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대졸자와의 임금격차는 1987년을 시작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급격한 임금격차 감소는 미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은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대졸자 노동공급 또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Katz and Murphy(1992)를 필두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ed 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개념이 이론적 측면과 실증분석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Katz and Murphy(1992)에 따르면 미국은 대졸자로 분류되는 숙련기술자(skilled worker)와 비숙련기술자(unskilled worker)가 생산함수에서 대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경우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격차는 벌어지고 대졸자의 노동공급도 동시에 증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정확히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서 1981년부터 대학 입학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이때 입학한 사람들이 졸업하게 되는 1987년부터 노동시장에 대졸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가 1987년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 수준의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한국은 단순히 노동공급의 증가로 대졸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의 대체 관계 여부나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7] 남녀별 학력 간 임금 격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V-7]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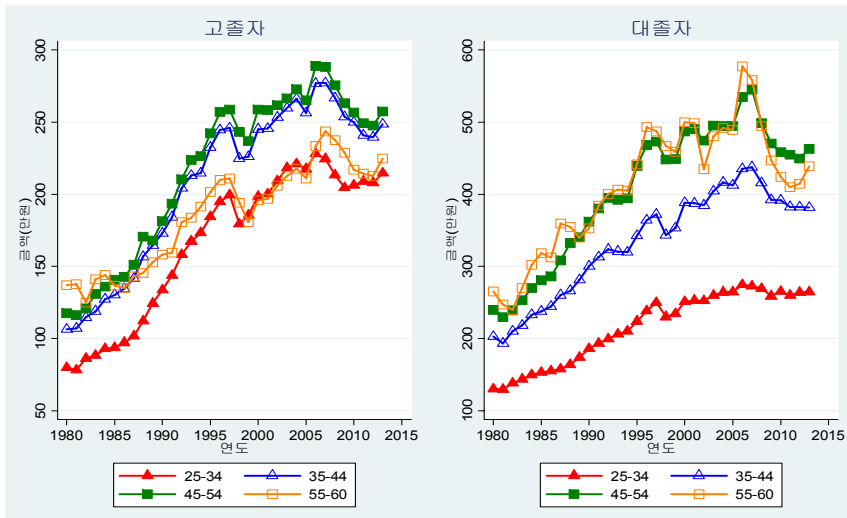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다음은 학력 간 임금격차 수준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패널은 고졸 미만, 두 번째 패널은 전문대졸, 마지막 패널은 대졸자와의 임금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 여성, ■ 남성의 임금격차를 의미한다. 우선, 고졸 미만과의 임금격차 감소는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임금 프리미엄 증가 속도는 여성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졸의 임금 프리미엄은 198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서 들어서면서 전문대 프리미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남성은 여전히 10% 정도 높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 대졸자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대졸 프리미엄이 1987년부터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 들어서면서 감소 추세가 사라지고 남자는 50% 여자는 40% 수준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력 간 임금격차를 연령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각 연령대별 고졸자와 대졸자의 실질임금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V-8] 연령별 고졸, 대졸자 실질임금 추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연령대별로 대졸자의 임금 수준이 더 높은 곳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실질임금 추세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고졸자는 55~60세를 제외하고는 고졸자의 임금추세의 기울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대졸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25~34세와 나머지 연령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학력 내에서 연령 간 임금 수준의 격차는 연령 간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데, 고졸자의 경우 연령 간 임금격차의 추세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대졸자의 경우 연령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연령대별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을 1980년 수준으로 표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림도 같이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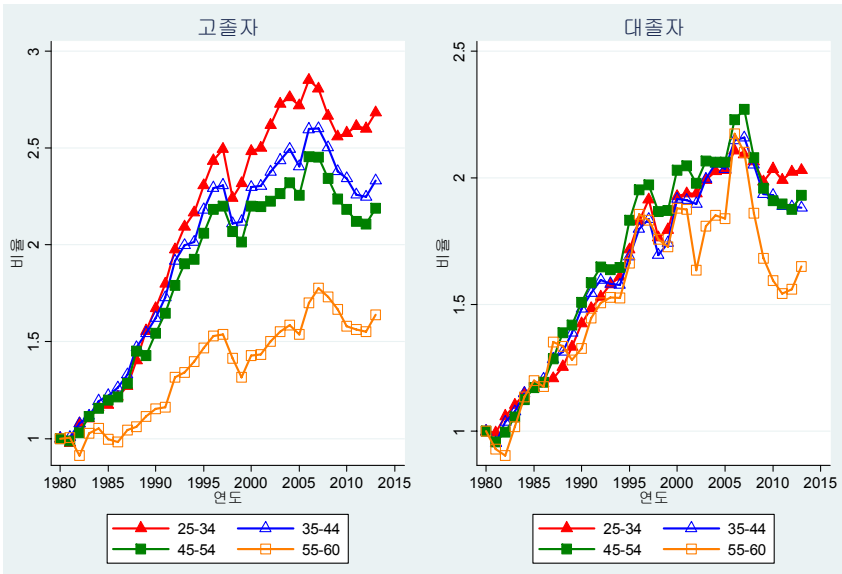
〈표 V-3〉 연령별 고졸, 대졸자 평균 월급여 성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

연도	25세~34세		35세~44세		45세~54세		55세~60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80~'84	3.92	3.59	4.56	3.69	3.77	3.10	1.56	3.63
'85~'89	6.08	3.01	5.33	3.86	4.43	4.78	1.23	2.64
'90~'94	6.87	3.87	5.50	2.62	6.17	3.04	4.73	3.61
'95~'99	1.56	2.35	1.20	2.16	1.05	2.76	-1.01	2.71
'00~'04	3.59	2.48	3.35	3.42	2.90	2.04	3.82	1.75
'05~'09	-1.46	-0.38	-0.84	-1.11	-0.61	-0.84	1.16	-1.38
'10~'14	1.21	0.57	-0.46	-0.71	-0.49	-0.36	-0.37	-0.39
평균	3.11	2.21	2.66	1.99	2.46	2.08	1.59	1.80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V-9] 연령별 고졸, 대졸 실질임금 표준화 추세(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평균 실질임금의 수준은 고졸자가 낮지만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고졸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34세의 경우 고졸자는 지난 35년간 3.11%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일한 연령대의 대졸자는 2.21%밖에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대졸자는 연령에 따른 임금상승률의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고졸자는 55~60세의 임금 상승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상승률이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가 포함되어 있는 '95~'99년의 임금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대졸자의 임금 성장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히려 대졸자의 임금 성장률이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는 고졸자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난 대신 2008년 금융위기는 주로 대졸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는 명목표시로 된 연령별 고졸자와 대졸자 평균 월급여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기준 25~34세 고졸자의 월급은 231만원이고 대졸자의 월급은 28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졸자의 경우 35~44세에 들어서면서 월급여가 44%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고졸자의 임금은 같은 연령대로 진입하면서 15%밖에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학력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4〉 명목표시 연령별 고졸, 대졸자 평균 월급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명목표시, 단위: 만원)

연도	25세~34세		35세~44세		45세~54세		55세~60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80	19.4	31.7	25.9	49.2	28.5	58.2	33.3	64.5
'85	32.1	52.4	44.6	81.4	48.2	96.1	46.8	109.0
'90	59.6	82.8	77.1	133.8	80.8	161.3	70.5	157.1
'95	111.0	134.9	140.0	206.2	145.7	264.4	121.3	265.8
'00	145.2	183.8	179.1	283.8	189.0	356.0	143.2	365.2
'05	187.4	228.2	220.7	355.3	228.4	425.7	181.7	4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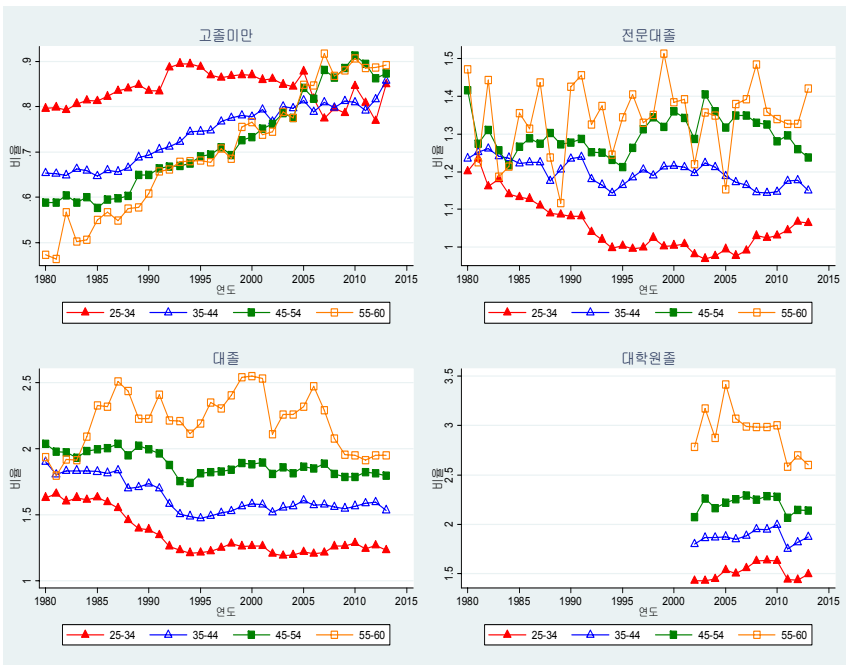
〈표 V-4〉의 계속

연도	25세~34세		35세~44세		45세~54세		55세~60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07	202.8	246.5	250.3	395.2	260.4	491.7	220.1	503.9
'08	201.6	254.7	252.2	393.1	260.3	471.3	224.6	467.1
'09	198.8	251.6	246.2	381.2	255.4	456.5	222.2	434.2
'10	206.2	265.6	249.8	391.4	256.6	458.1	217.0	423.6
'11	217.4	270.2	250.5	397.9	259.3	473.2	222.9	426.5
'12	221.1	280.7	254.5	406.2	263.2	478.0	226.2	440.9
'13	231.1	285.2	267.6	410.7	277.2	498.4	242.0	472.2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다음은 연령별 학력 간 임금 격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V-10] 연령별 학력 간 임금격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고졸자와 고졸 미만 간의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크지 않고 지난 30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5~34세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험연수가 축적되면 고졸 학력 프리미엄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졸 학력이 초기 인적 자본의 역할만 하고 이후에는 노동시장 경험을 통해서 신규로 축적되는 인적 자본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54세 미만은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이 1980년대보다 하락했다. 25~34세 미만의 경우 1987년 부근부터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졸자 공급 증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이기 때문이다. 반면 35세 이상은 임금 프리미엄 하락시점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이는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낮은 1980년대 후반 세대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995년 이후부터는 55세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대졸자 임금격차 수준의 간격이 각 연령대 간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코호트에서 대졸자 임금격차가 최초 노동시장 진입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노동시장 경험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미국의 실증분석 결과(Altonji and Pierret, 2001; Farber and Gibbons, 1996)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경험연수의 축적에 따라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졸업장이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대학 졸업 여부가 실제 능력(true productivity)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인적자본의 관점에서는 대졸자가 종사하는 영역에서는 경험연수로 축적되는 인적자본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의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다. 연령 간 임금격차

연령 간 임금격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연령 구간을 25~34세, 35~44

세, 45~54세, 55~60세 등과 같이 4구간으로 구분한다. 연령 간 임금격차는 25~34세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과 나머지 해당 연령의 평균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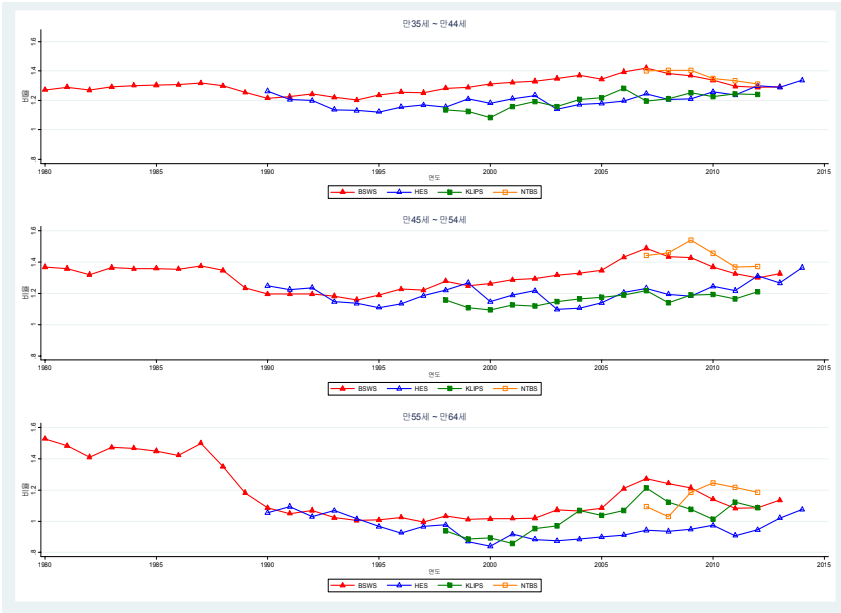
〈표 V-5〉 명목표시 연령별(만 25~34세, 만 45~54세) 평균 월급여

(명목표시, 단위: 만원)

연도	BSWS		HES		KLIPS		NTBS	
	25~34	45~54	25~34	45~54	25~34	45~54	25~34	45~54
'80	19.9	27.2	-	-	-	-	-	-
'85	33.4	45.4	-	-	-	-	-	-
'90	63.3	75.6	62.2	77.6	-	-	-	-
'95	117.3	139.3	126.9	140.8	-	-	-	-
'00	157.3	198.5	151.8	173.9	111.9	122.5	-	-
'05	206.0	277.4	207.7	236.3	159.5	187.4	-	-
'07	223.1	332.0	224.3	276.5	177.0	215.3	207.6	299.3
'08	228.3	327.6	245.3	292.8	185.7	211.4	204.7	299.0
'09	227.4	324.5	242.4	286.8	183.7	218.5	199.1	306.9
'10	240.1	328.6	245.8	305.7	192.3	229.1	212.7	309.9
'11	246.1	326.0	263.8	321.1	201.5	234.8	222.0	303.7
'12	254.9	331.3	267.3	350.3	205.9	248.8	232.9	319.4
'13	356.7	233.2	360.6	177.7	-	-	-	-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V-11] 연령 간 임금격차 - 실질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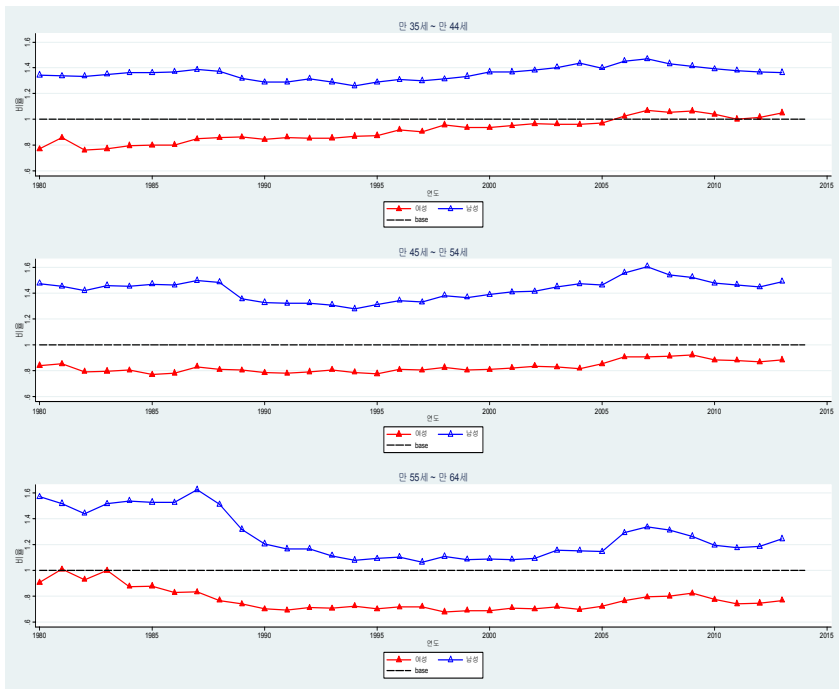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자료마다 수준은 다르지만, 35~44세와 45~54세 연령은 25~34세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 추세를 보면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령 간 임금격차가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앞서 살펴본 학력 구성과 연관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졸자의 증가로 인해 대졸과 고졸 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젊은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되면서 25~34세의 인적 구성이 고졸자에서 대졸자로 이동하면서 35세 이상 54세 이하 연령 그룹들과의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25~34세 그룹이 35세 이상 그룹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편입과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다시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55세 이상의 경우를 보면 1987년 이후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0년대 중반까지 25~34세와 거의 임금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2000년대 들어

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급속한 임금격차 하락은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에 대졸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987년과 1988년에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생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격차의 급속한 감소가 특별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구조가 급속히 바뀌면서 경험연수로 인해 축적된 인적자본보다 교육을 통해서 축적된 인적자본 수요가 더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Card and Lemieux(2001)가 대졸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의 변화를 코호트별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학력과 연령 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2] 남녀별 연령 간 임금격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다음은 연령 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성별로 나누어 좀 더 세분화해서 파악해보자. 위 그림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령 간 임금격차를 남녀로 구분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상위 패널은 35~44세, 중위 패널은 45~54세, 하위 패널은 55~60세와의 임금격차를 나타낸 것이고 + 선은 남성, - 선은 여성의 연령 간 임금격차를 그린 것이다.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남성의 임금은 45~54세에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임금은 25~34세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에 단절이 생긴 이후에 임금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직장이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5~44세의 경우 35세 미만과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35세 미만의 임금 수준을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패턴은 여성들의 결혼 시점이 늦어지면서 재취업으로 인한 재분류(sorting)가 이전에 비해 덜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낮은 경험 연수 프리미엄이 반드시 경력단절과 재취업에만 국한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력단절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도 경험연수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면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 하락 부분을 상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아야 될 동기 부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인력들이 쉽게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연령 간 임금격차의 패턴은 앞서 살펴본 다른 인적 사항 간의 임금격차 패턴과 더불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지금까지는 전체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와 관측되는 인적 사항으로 나타나는 소득격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근로소득 중에서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나 학력, 성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득격차는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률(return rate)에 의해서 나타난다. 연령이나 교육에서 나타나는 보상률의 차이는 인적 자본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각 경제주체들에게 교육 또는 노동시장의 경험연수를 통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동기 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 임금격차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든지 정책적 제약으로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는 해당 영역에 직접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반면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은 이와는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격차는 개별 생산성에 대한 충격(idiosyncratic productivity shock)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 개별 경제주체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insurance)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보험시장이 불완전(incomplete)한 경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보험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³¹⁾ 이러한 경우에 경제주체들은 예방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성 충격의 과거 실적(productivity history)에 따라서 자산 분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적 저축을 개인이 할 것인가 경제 전체에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득 중 관측되지 않는 부분의 분포에 대한 분석은 의미를 갖는다.

가. 관측되지 않는 부분 측정

관측되지 않는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Mincer regression으로 널리 알려진 다음과 같은 임금 방정식을 추정한다.

31) 이와 같은 경제를 불완전 시장(incomplete market)이라고 한다.

$$\ln w_{i,t} = X_{i,t}\beta_t + u_{i,t}$$

여기서 $X_{i,t}$ 는 개별 경제주체 i 의 t 시점에서의 특성으로 성별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 학력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 진입 후 거의 변화하지 않는 변수, 연령이나 노동시장 경험연수와 같이 매 기간 변하는 변수 등으로 구성된다. 위 회귀식은 매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기 때문에 성별이나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보상률(return rate)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표기했다.³²⁾ 회귀식을 추정하고 남은 잔차 부분인 $u_{i,t}$ 이 관측되지 않는 부분이다.

잔차 부분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u_{i,t} = \mu_i + \omega_{i,t} = \mu_i + z_{i,t} + \epsilon_{i,t}$$

μ_i 은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한다. $\omega_{i,t}$ 가 바로 개별 생산성 충격(idiosyncratic productivity shock)을 말한다. 이 부분은 다시 영구적 충격(permanent shock)인 $z_{i,t}$ 과 일시적 충격(temporary shock)인 $\epsilon_{i,t}$ 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생산성 충격은 다음과 같은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begin{aligned} z_{i,t} &= z_{i,t-1} + \eta_{i,t}, & \eta_{i,t} &\sim (0, \sigma_{\eta,t}^2) \\ \epsilon_{i,t} &\sim (0, \sigma_{\epsilon,t}^2) \\ \mu_i &\perp \eta_{i,t}, \eta_{i,t} \perp \epsilon_{i,t} \end{aligned}$$

개인의 고정효과 부분과 생산성 충격 부분은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 부분도 역시 상호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의 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잔차 부분의 분해(decomposition)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기로

32) β_t 에서 t 를 하첨자로 표기한 것은 보상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다.

다시 잔차 부분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고정효과 부분과 생산성 충격 부분으로 구성하여 분산을 구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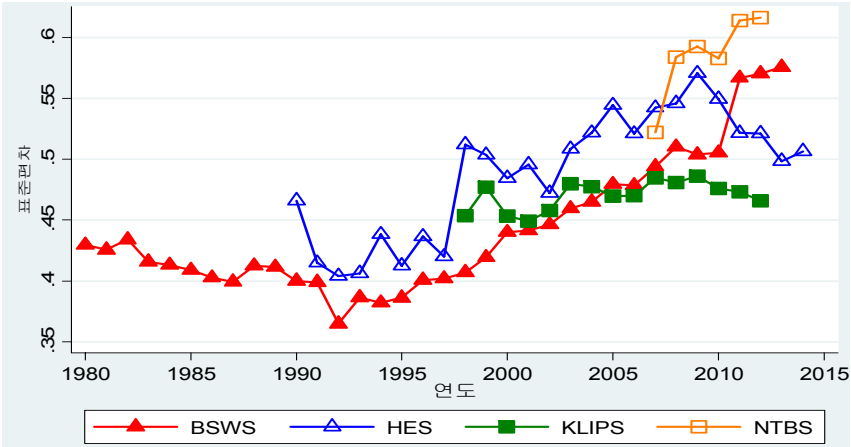
$$\text{var}(u_{i,t}) = \text{var}(\mu_i) + \text{var}(\omega_{i,t})$$

로 나타낼 수 있다.³³⁾ 잔차의 분산은 전체 근로소득의 분산 중에서 관측되는 부분으로 설명되고 남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다시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부분인 $\text{var}(\mu_i)$ 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text{var}(\omega_{i,t})$ 로 나뉘게 된다. 개인 고정효과 부분은 잔차 분산에서는 포함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할 뿐이지 개인의 임금 프로세스에 변동성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관점에서 μ_i 는 임금 변동성을 가져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μ_i 의 분산이 크기 때문에 잔차 분산이 큰 것이라면 보험(insurance)의 역할이 크지 않고, 나아가서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해서 보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지게 된다. 여기서 개인의 타고난 능력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도 확률적으로 받게 된 것으로 인식하면 이 부분도 생산성 충격과 유사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타고난 능력에 대해서도 보험 기능을 제공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분배 기능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개인의 타고난 능력 부분에 대해서 확률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노동공급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경제에서 개인 고정효과 부분이 크게 나타난다면 정부의 재분배 기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

33) 여기서 개인의 고정효과 부분과 개별 생산성 충격 부분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공분산이 고려되지 않는다.

나.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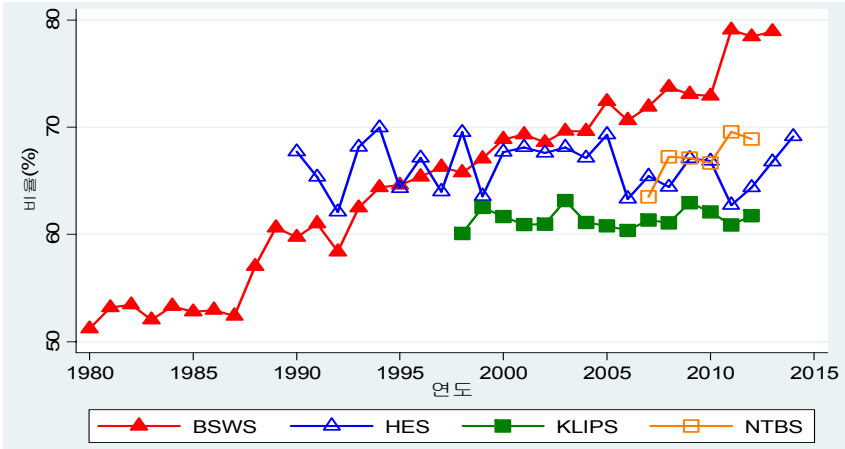
[그림 V-13] 로그 실질임금 잔차의 표준편차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위 그림은 임금 방정식을 추정한 후 얻은 잔차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한국노동패널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들에서 잔차의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소득 분포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세후 자료이기 때문에 재분배가 일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준편차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개별 생산성 충격에 대해서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해서 보험(insurance)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가장 긴 시계열의 추세를 보면 전체 소득 분포의 표준편차와는 달리 V자 형태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까지 잔차의 표준편차가 감소하지만 그 정도가 전체 소득 분포만큼 크지 않다.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잔차의 표준편차가 전체 소득의 표준편차와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V-14] 전체 근로소득 불평등 중 잔차 비율: 잔차 분산/전체 분산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전체 소득 불평등 변화 중에서 잔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서 잔차의 분산을 전체 분산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했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는 잔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0%와 65% 수준에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세후소득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의 분산과 잔차의 분산에 추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는 전체 소득의 분산의 증가 속도와 잔차 분산의 증가 속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나 재정패널에서는 잔차의 분산에 의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다른 자료와는 증가하면서 잔차의 역할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사실임에 비춰볼 때 잔차 비중에 대한 추세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나 재정패널에서 관측되는 것처럼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0년간 한국 임금 근로자들의 유전적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근로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잔차 중 개별 생산성에 대한 충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³⁴⁾ 이는 노동시장

의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과 연계시킬 수 있다. Low, Meghir and Pistaferri(2010)은 임금 방정식에 잔차로 대변되는 개별 생산성 충격이 나타나는 경로에 대해서 여러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생산성 변동과 고용 상태 변화로 나타나는 변동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의 경우 외 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Han(2014)에 따르면 실업률이 증가했고, 이는 이직률(job separation)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별 생산성 충격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을 증가시키고, 이직률(job finding rate)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 잔차 분산 요인 분해

앞에서 살펴본 임금의 잔차 부분을 분해하고자 한다. 우선, 고정효과 부분과 생산성 충격 부분으로 구분해서 각각 분산의 크기를 측정한다. 다음은 RED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성 충격 부분을 영구적 충격(permanent shock)과 일시적 충격(transitory shock) 부분으로 구성하여 각 부분의 분산을 측정하여 크기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1차 차분 방식(first difference method)과 수준 방식(level method)을 적용하고자 한다. Heathcote, Perri, and Violante(2010)에 따르면 생산성 충격 부분에 대한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두 방법으로 추정된 각 부분의 분산의 크기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 추정결과 1차 차분 방식의 결과와 수준 방식의 결

34)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에 대한 보상이 상승했기 때문에 잔차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생산성은 학력이나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이 같이 증가해야지만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전문대졸자나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1990년 중반 이후로 안정적이고, 연령에 대한 임금 격차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생산성에 대한 보상이 증가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가 차이가 난다면 생산성 충격 부분은 확률적 모형이 잘못 구성 (mis-specification)된 것으로 볼 수 있다. RED2010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1차 차분 방식과 수준 방식으로 얻어진 생산성 충격의 분산들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차이를 없앨 수 있는 임금 과정 (wage process)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불완전 시장(incomplete market)이 있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바탕으로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간단하면서도(parsimonious) 임금의 공분산 구조(the covariance structure of wages)를 잘 추정해낼 수 있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발점으로 잔차 요인 분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정에 앞서 생산성 충격 부분의 분산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³⁵⁾ 먼저, 임금 방정식의 잔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begin{aligned}
 u_{i,t} &= \mu_i + \omega_{i,t} = \mu_i + z_{i,t} + \epsilon_{i,t} \\
 z_{i,t} &= z_{i,t-1} + \eta_{i,t}, \quad \eta_{i,t} \sim (0, \sigma_{\eta,t}^2) \\
 \epsilon_{i,t} &\sim (0, \sigma_{\epsilon,t}^2) \\
 \mu_i &\perp \eta_{i,t}, \eta_{i,t} \perp \epsilon_{i,t}
 \end{aligned}$$

앞서 살펴본 잔차에 대한 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z_{i,t}$ 의 계수값이 $\rho=1$ 로 설정된 것이다. 즉, 지속적 충격 부분을 영구적 충격으로 가정을 바꾼 것이다. 여기서 추정하고자 하는 값들은 σ_{α}^2 과 $\{\sigma_{\eta,t}^2\}_{t=1}^T$, $\{\sigma_{\epsilon,t}^2\}_{t=1}^T$ 이다. 그리고 관측되는 자료는 개별 경제주체 i 의 잔차 임금의 시계열인 $\{u_{i,t}\}_{t=1,i=1}^{T,N}$ 이다.

35) 추정 방법은 Heathcote, Perri, and Violante(2010)에서 제시된 방법 대신 Lise et al.(2014)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두 방법 간의 차이는 1차 차분과 2차 차분의 차이이다. Heathcote, Perri, and Violante(2010)은 2차 차분을 이용해서 추정했는데, 이 경우 재정패널의 패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추정에 사용되는 관측 수가 적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차분을 활용한 Lise et al.(2014)을 이용한 방법을 활용한다.

1차 차분을 이용한 방식을 이용하여 σ_α^2 과 $\{\sigma_{\eta,t}^2\}_{t=1}^T$, $\{\sigma_{\epsilon,t}^2\}_{t=1}^T$ 를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잔차 임금의 차분은 다음과 같다.

$$\Delta u_{i,t} = (z_{i,t} + \epsilon_{i,t}) - (z_{i,t-1} + \epsilon_{i,t-1}) = \eta_{i,t} + \epsilon_{i,t} - \epsilon_{i,t-1}$$

이를 이용하여 1차 차분의 분산과 1차 차분과 전기 1차 차분과의 공분산(covariance)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var}(u_{i,t}) = \sigma_{u,t}^2 = \sigma_{\eta,t}^2 + \sigma_{\epsilon,t}^2 + \sigma_{\epsilon,t-1}^2$$

$$\text{cov}(\Delta u_{i,t}, \Delta u_{i,t-1}) = \text{cov}(\eta_{i,t+1} + \epsilon_{i,t+1} - \epsilon_{i,t}, \eta_{i,t} + \epsilon_{i,t} - \epsilon_{i,t-1}) = -\sigma_{\epsilon,t}^2$$

위의 관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eta_{i,t}$ 와 $\epsilon_{i,t}$ 는 iid이고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sigma_{\epsilon,t}^2\}_{t=1}^T$ 는 $\Delta u_{i,t}$ 와 $\Delta u_{i,t-1}$ 의 공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sigma_{\eta,t}^2\}_{t=1}^T$ 는 $\Delta u_{i,t}$ 의 분산에서 $\{\sigma_{\epsilon,t}^2\}_{t=1}^T$ 를 차감하여 구해진다.

$$\sigma_{\epsilon,t}^2 = -\text{cov}(\Delta u_{i,t}, \Delta u_{i,t-1})$$

$$\sigma_{\eta,t}^2 = \sigma_{u,t}^2 - \sigma_{\epsilon,t}^2 + \sigma_{\epsilon,t-1}^2$$

반면, 수준 방법은 차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차항의 분산과 공분산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차분 방법에서는 차분 과정에서 고정효과 부분이 상쇄되었으나 수준 방법에서는 고정효과 부분이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쇄되기 때문에 고정효과 분산의 역할은 없다. $u_{i,t}$ 의 분산과 $u_{i,t}$ 의 전기와 다음기와의 공적분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text{var}(u_{i,t}) = \sigma_\mu^2 + \sigma_{z,t}^2 + \sigma_{\epsilon,t}^2 = \sigma_\mu^2 + \sigma_{z,t-1}^2 + \sigma_{\eta,t}^2 + \sigma_{\epsilon,t}^2$$

$$\text{cov}(u_{i,t+1}, u_{i,t}) = \text{cov}(\mu_i + z_{i,t} + \eta_{i,t+1} + \epsilon_{i,t+1}, \mu_i + z_{i,t} + \epsilon_{i,t}) = \sigma_\mu^2 + \sigma_{z,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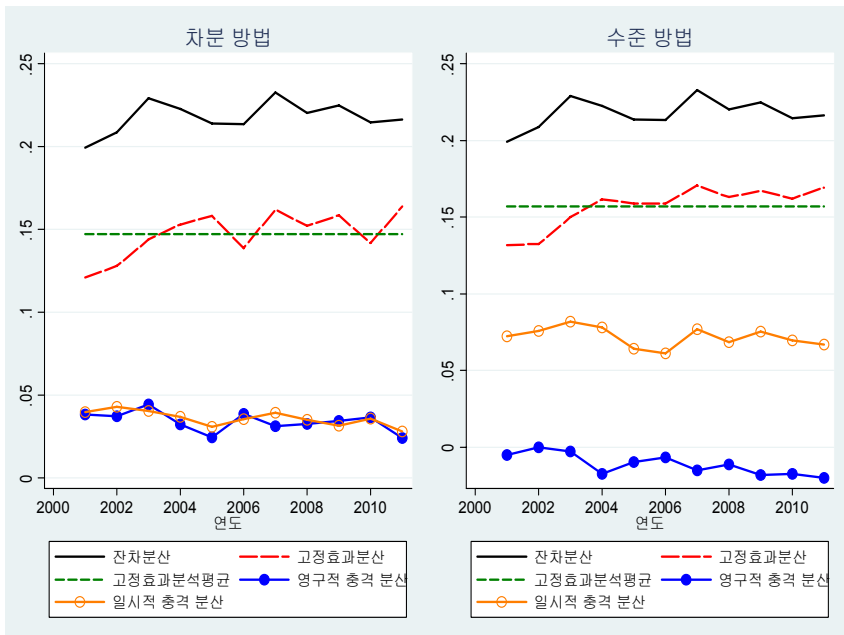
$$\text{cov}(u_{i,t}, u_{i,t-1}) = \text{cov}(\mu_i + z_{i,t-1} + \eta_{i,t} + \epsilon_{i,t}, \mu_i + z_{i,t-1} + \epsilon_{i,t-1}) = \sigma_\mu^2 + \sigma_{z,t-1}^2$$

이 식들을 이용하여 분산에서 공분산을 차감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text{var}(u_{i,t}) - \text{cov}(u_{i,t+1}, u_{i,t}) &= \sigma_{\epsilon,t}^2 \\ \text{var}(u_{i,t}) - \text{cov}(u_{i,t}, u_{i,t-1}) &= \sigma_{\eta,t}^2 + \sigma_{\epsilon,t}^2 \end{aligned}$$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금 잔차의 분산은 고정효과에 대한 분산과 영구적 충격 분산, 일시적 충격 분산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임금 잔차가 최소 3개의 시점에 걸쳐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생산성 충격에 대한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3기간에 걸친 패널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성 충격의 분산에 대한 추정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서 한다.

[그림 V-15] 잔차 분산 분해 결과(한국노동패널)



자료: 한국노동패널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위 그림은 한국노동패널을 통해서 잔차의 각 부분을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실선은 임금 방식식 추정 후 얻은 잔차의 분산이다. ---은 고정효과 분산 추정 결과이다. 고정효과 분산은 평균적으로 차분 방식에서는 0.147, 수준 방식에서는 0.157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변동성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 따르면 고정효과 분산은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추정결과 변동성은 고정효과에 대한 보상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추세는 고정효과에 대한 보상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으로 남겨놓는다. 고정효과 분산은 두 방법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에 대한 표준편차는 매우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차분방식에서는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의 분산이 0.0362와 0.0342로 유사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수준 방식에서는 일시적 충격은 0.072로 차분방식의 2배 정도의 크기를 보이는 반면 일시적 충격은 음(-)의 값을 갖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두 방식을 추정된 각 부분의 분산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의 경우도 생산성 충격 부분에 대한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는 차분방식을 통해서 추정된 영구적 충격의 분산이 수준방식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수준방식으로 추정된 영구적 분산은 음(-)의 값을 갖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 (Heathcote, Perri, and Violante, 2010). 그러나 일본은 두 방식으로 추정된 영구적 충격의 분산 크기는 유사하나 일시적 충격 부분은 수준으로 추정된 부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분산의 추정결과가 나타나는 패턴이 모두 다르다. 하지만 동일하게 두 방법 간의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국가별로 임금의 공분산 구조(the covariance structure of wage)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절에서 생산성 충격 부분을 영구적 충격 부분과 일시적 충격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의 분산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

다. 생산성 충격 부분을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추정할 것인지에 논의가 근로소득 불평등과 무관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 충격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완전시장(incomplete market)하에서 개인이 받는 생산성 충격에 대해서 예방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Pijoan-Mas(2006)은 불완전시장에 생산성 충격이 있는 경우 경제주체들은 예방적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서 위험에 대비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낮은 생산성 충격을 받은 경우 예방적 저축이 불가능해지면 노동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낮은 생산성 충격에 대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완전시장(complete market)에서보다 총노동공급은 18% 증가하지만 총소비는 6% 하락하고 총노동생산성은 18% 하락한다는 것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낮은 생산성 충격을 받아 소득 수준이 낮아 개인이 예방적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해서 생산성 충격에 대한 사회보험을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생산성 충격의 정도와 개인이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Floden and Linde(2001)은 미국과 스웨덴에 대해서 개인의 생산성 충격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회보험의 재분배 역할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충격의 확률 과정이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에서 소득이동성을 나타내는 이행 행렬(transition matrix)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³⁶⁾ 따라서 잔차 부분 중 생산성 충격에 대한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파악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36) 생산성 충격 부분의 확률 모형을 가지고 이행 확률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Tauchen(1986)이 제시한 방법이다.

4.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 수준과 소득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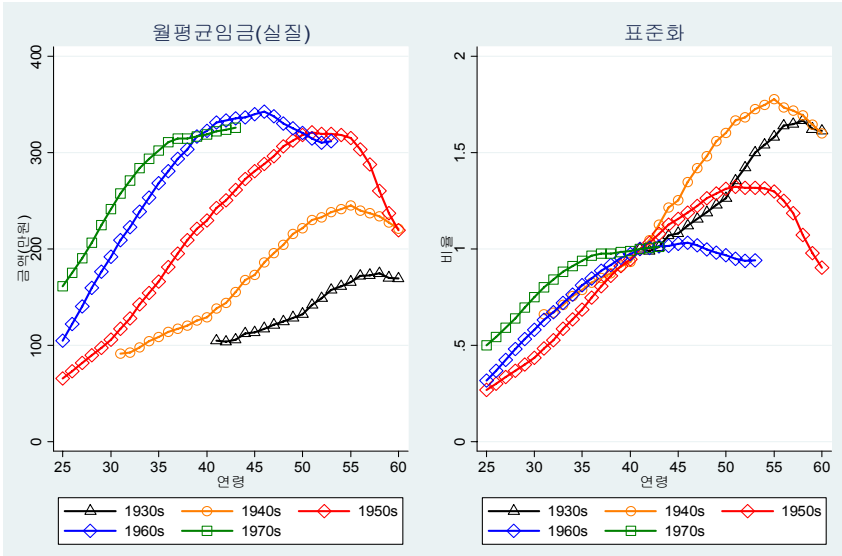
다음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소득 수준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본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도 고령화 사회로 이동을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세대 간 이견을 보이고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세대별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소득 불평등도 같은 맥락에서 세대별로 어떤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세대 간 갈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소득 수준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시점에 따라 생애주기 프로파일의 차이를 비교하는 코호트별 분석을 한다. 코호트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3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단위로 구성한다. 연도별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임금 프로파일은 부록에서 제공한다.

가.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소득 수준의 변화

먼저,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을 코호트별로 살펴본다. 코호트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긴 시계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를 이용한다. 각 코호트별 실질임금 프로파일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질임금 증가율을 비교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코호트의 41세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결과도 같이 제시한다.³⁷⁾

37) 41세를 중심으로 표준화한 이유는 1930년대 생의 첫 번째 임금 자료가 41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준화는 각 코호트별로 다른 모든 연령의 임금 수준을 41세 임금 수준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41세에 모두 비율이 1로 나타난다.

[그림 V-16] 코호트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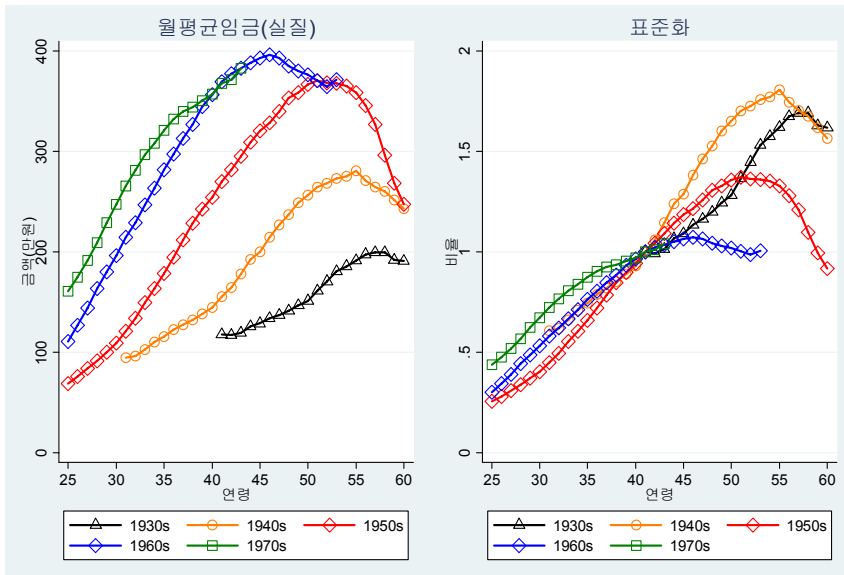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위 그림은 코호트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실질임금 프로파일이 코호트가 낮아질수록 상향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코호트들이 더 높은 임금 프로파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년대 코호트의 경우 35세까지는 1960년대 코호트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경험했지만 35세 이후에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면서 1960년대 코호트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관계있다. 코호트별 실질임금 프로파일의 정점 연령을 살펴보면 10년 간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모두 최근 2005년 이후 상황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질임금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이후에는 0%대 성장률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우측에 표준화된 임금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코호트가 젊어질수록 임금 프로파일의 기울기가 완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940년대생부터 1950년대생은 1965년부터 1995년까지 고도 성장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임금 프로파일이 급속히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임금 프로파일의 기울기는 상당히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고속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호트 간 실질임금의 성장률 속도가 크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연령에서의 자산 축적 정도에서도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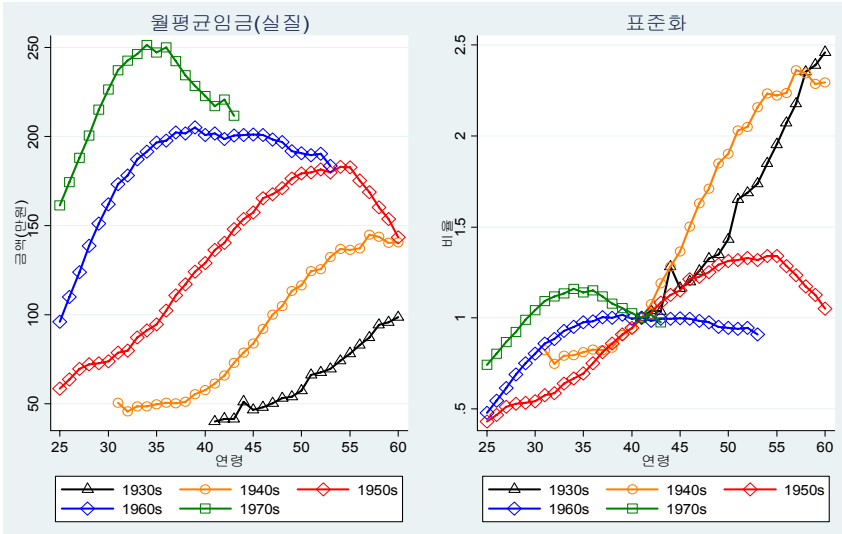
[그림 V-17] 코호트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남성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V-17]과 [그림 V-18]은 코호트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다. 남성의 프로파일은 전체 프로파일과 유사한 반면, 여성의 프로파일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코호트가 젊어질수록 임금 프로파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35년간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임금 성장률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코호트가 젊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V-18] 코호트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여성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불평등 변화

다음은 코호트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살펴보자. 소득 불평등은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같은 연도에 태어난 경제주체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다. Deaton and Paxson(1994)은 미국과 영국, 대만의 가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같은 코호트 내에서 소득에 대한 불평등이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상소득가설을 이용하면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영구적 충격이 축적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잔차의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상기하자. 여기에 연령, h ,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_{i,h,t} = z_{i,h,t} + \epsilon_{i,h,t} = z_{i,h-1,t-1} + \eta_{i,h-1,t-1} + \epsilon_{i,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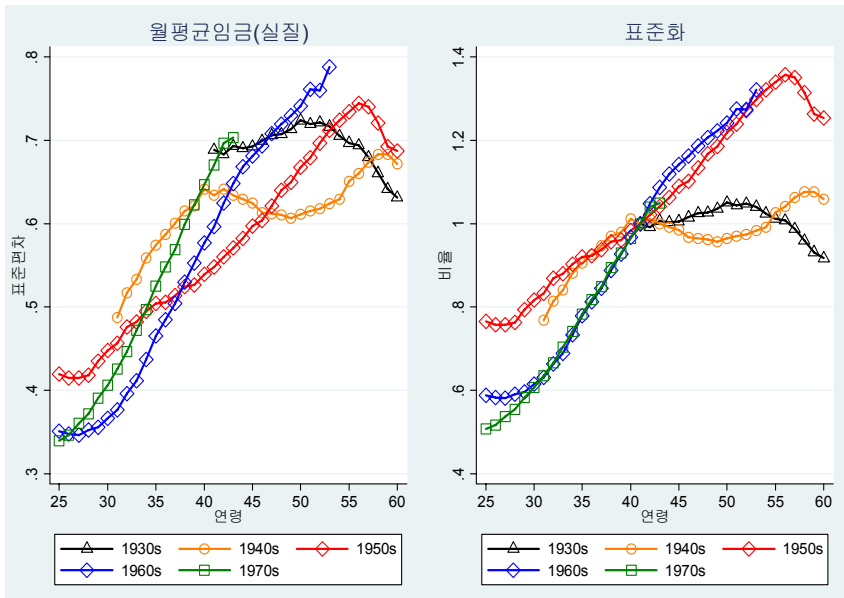
$e_{i,h,t}$ 의 분산을 구하면 $var(e_{i,h,t}) = var(z_{i,h,t}) + \sigma_{\epsilon,t}^2$ 와 같다. 여기서 모든 개인 i 가 동일한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var(z_{i,h,t})$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ar(z_{1,t}) = \sigma_{\eta}^2$$

$$var(z_{h,t}) = var(z_{h-1,t-1}) + \sigma_{\eta}^2 = h \cdot \sigma_{\eta}^2 \quad \text{where } h > 1$$

따라서 $var(e_{i,h,t}) = var(z_{i,h,t}) + \sigma_{\epsilon,t}^2 = h \cdot \sigma_{\eta}^2 + \sigma_{\epsilon,t}^2$ 로 표현되기 때문에 생산성 충격에 대한 분산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고, 소득 불평등이 커지게 된다.

[그림 V-19] 코호트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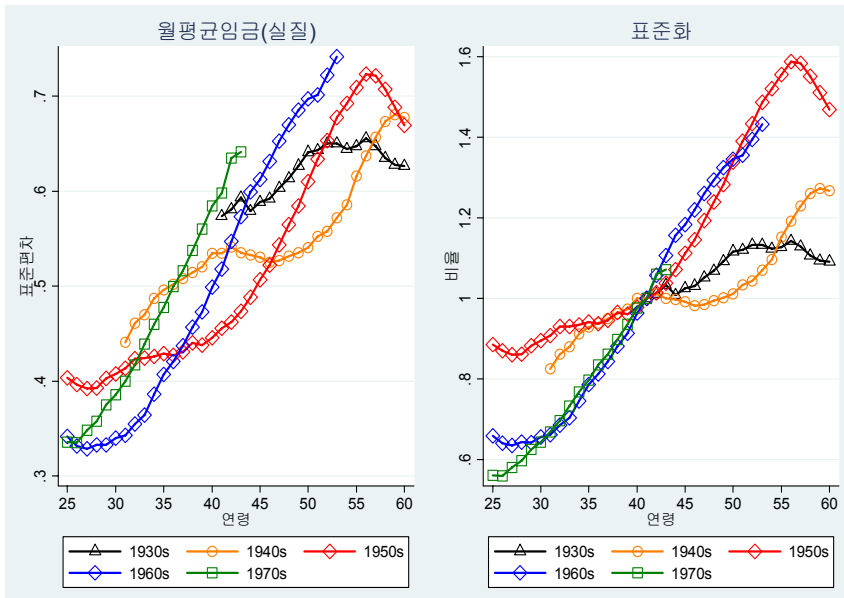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V-19]는 코호트별 생애주기에 따른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Deaton and Paxson(1994)이 발견한 것과 유사하게 한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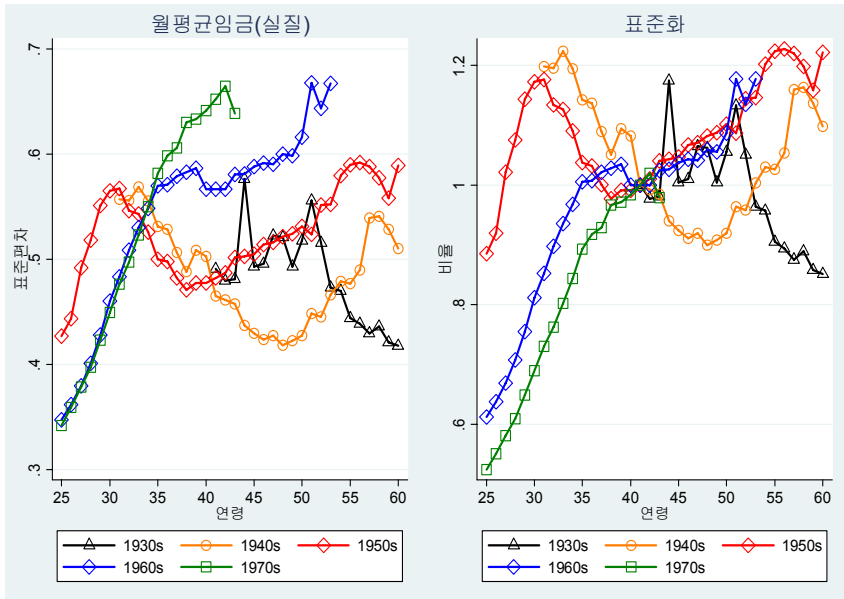
코호트 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30년대생과 1940년대생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누워진 S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세대는 한국 경제 발전 초기 세대들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패턴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1세의 표준편차로 표준화된 결과를 살펴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코호트의 소득 불평등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5세의 영구적 충격의 크기가 이전세대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앞의 실질임금 프로파일과 결합하여 볼 때, 1960년대와 1970년대생은 이전세대보다 소득증가율은 낮은 반면 소득의 불확실성은 더 큰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20] 코호트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남성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V-21] 코호트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여성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V-20]~[그림 V-21]에서는 코호트별 생애주기 소득 불평등 프로파일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전체 프로파일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소득 불평등 프로파일이 U자 혹은 M자 형태를 나타낸다.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생의 경우 이러한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M자형으로 나타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코호트에서는 소득 불평등은 35세까지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경제활동인구도 이때 감소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쉽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여성 인력들이 동질적으로 변화되어 소득분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³⁸⁾ 그러나 1970년

38)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로그실질임금은 임금 방정식의 잔차가 아니고 전체 실질임금을 감안하면 충격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인적 구성 요소의 변화에 따른 구성 효과(compositional effect)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대생의 경우 35세를 전후해서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최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M자형이 5년 정도 늦춰진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40세를 전후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아직 축적되지 않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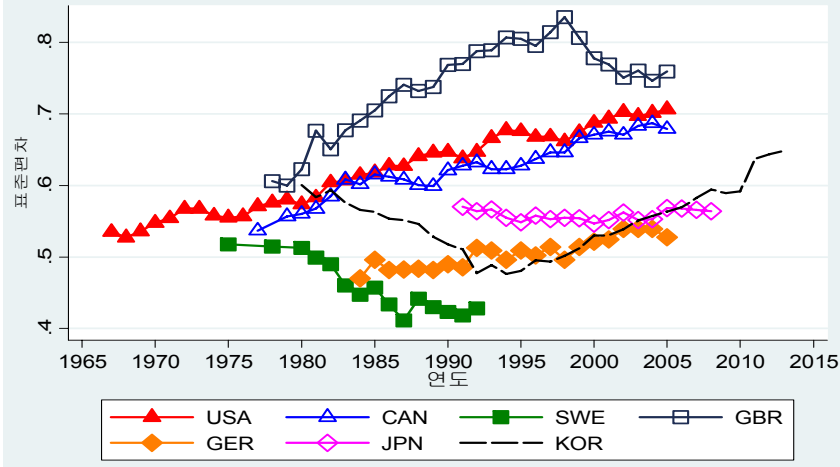
VI. 근로소득 불평등 국가 간 비교

지금까지 가구 자료(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와 사업체 자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조사 대상의 범위에 제약은 있지만 가장 긴 시계열에서 일관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결과와 RED2010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하고자 한다. 전체 근로소득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성별과 학력, 연령 간에 나타나는 임금 격차, 잔차 부분의 역할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 RED2010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멕시코 등 9개국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 Lise et al.(2014)이 일본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총 10개국에 대한 자료가 있다. 이 중에서 미국(USA)과 캐나다(CAN), 스웨덴(SWE), 영국(GBR), 독일(GER), 일본(JPN) 등 6개국의 결과를 한국(KOR)과 비교하고자 한다.³⁹⁾ RED2010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자료 구축과 변수를 최대한 통일하였지만 사용된 자료들의 특성이 다르고 국가별로 제도적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아래 결과들이 제공하는 수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는 추세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비교·설명하고자 한다.

39) 비교대상에서 제외된 스페인, 러시아, 멕시코는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서 직접적인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근로소득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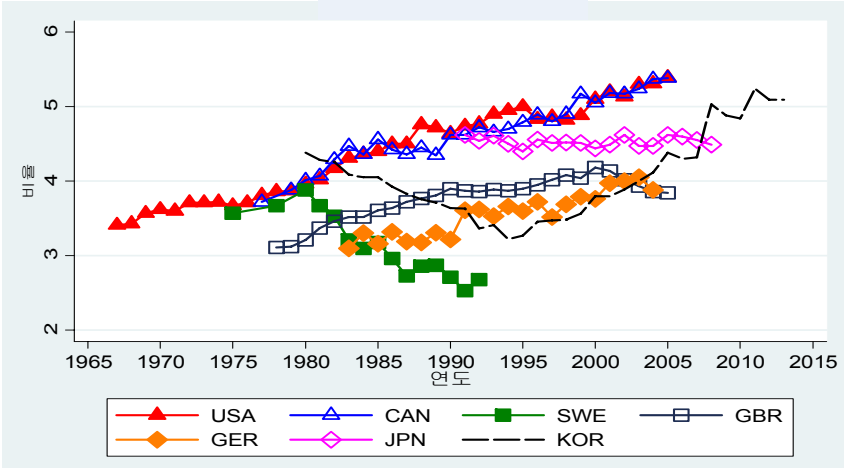
[그림 VI-1] 국가 간 비교 - 로그임금 표준편차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 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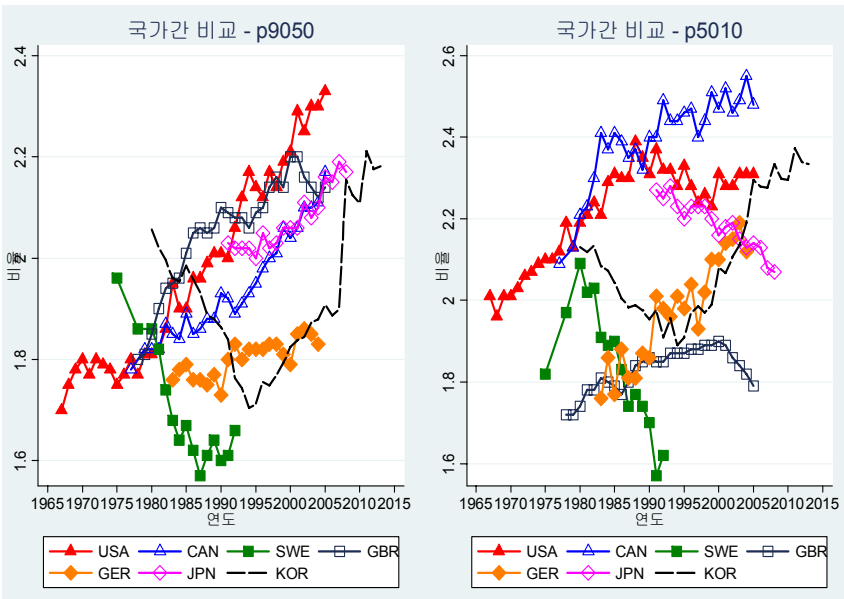
위 그림은 로그 실질임금의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소득 불평등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미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미국과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그 정도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여타의 국가들과 다르게 불평등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 이후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거나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V자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 임금 프리미엄이 급격히 감소한 점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발전 정도가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0년 중반 이후의 추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미국이나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VI-2] 국가 간 비교 - P9010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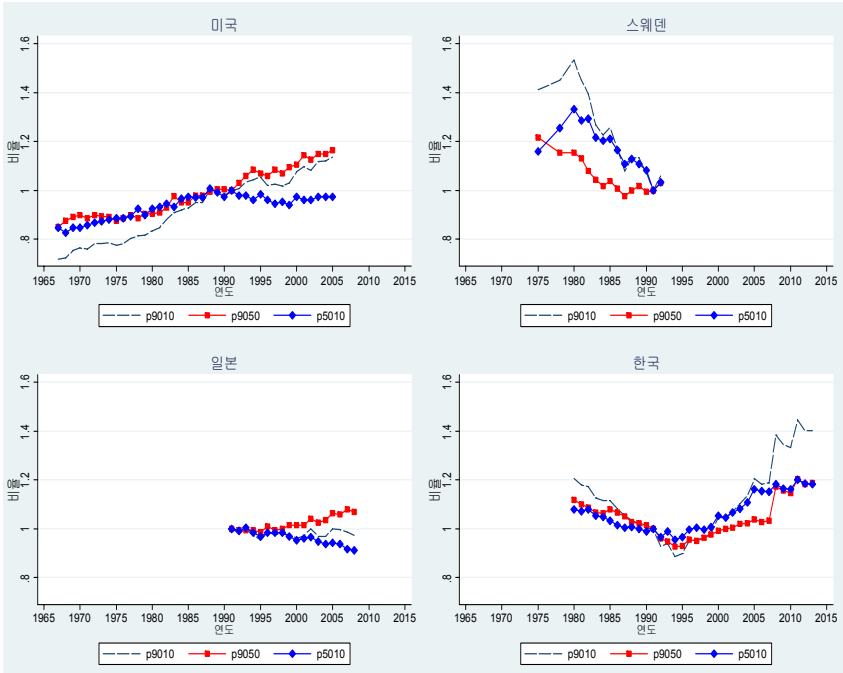
[그림 VI-3] 국가 간 비교 - p9050, p5010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90/10 소득분위 비율 역시 로그 임금의 표준편차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90/50과 50/10의 비율로 나누어보면 국가마다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우선 좌측 패널의 90/50 비율을 살펴보자. 미국과 캐나다, 영국은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독일도 증가하지만 그 속도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90/50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90/50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상위 계층으로의 소득편중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 우측 패널은 저소득 계층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주는 50/10 비율이다. 50/10 비율은 90/50 비율보다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스웨덴은 모든 불평등 지표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증가 속도가 고소득계층의 소득 불평등보다는 완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저소득계층 내의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고소득 계층의 소득 불평등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저소득계층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일본인데, 저소득계층의 불평등이 스웨덴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소득계층의 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지만 저소득계층의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저소득계층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을 좀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미국과 스웨덴, 일본, 한국에 대해서 1991년을 기준으로 90/10과 90/50, 50/10을 1로 표준화해서 나타냈다.

[그림 VI-4] 국가 간 비교 - p9050, p5010(1991년 표준화)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미국, 스웨덴, 일본 데이터 저자 계산(검색일자: 2015. 4. 1)

위 그림을 보면 미국은 90/10이 증가하는데 1990년대 이전까지는 90/50과 50/10이 동일하게 기여한 반면 1990년 이후에는 90/50에 의해서 90/10의 증가가 주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90/50과 50/10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체 소득 불평등이 고소득과 저소득층 내의 불평등 증가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은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고소득층 내의 불평등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최근 논의처럼 고소득층 내의 고소득자인 최상위 계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이유가 저소득층 내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은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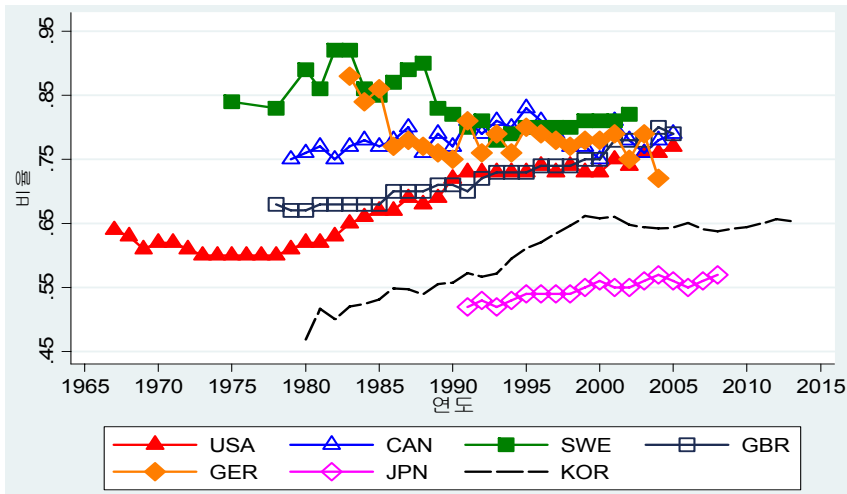
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내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관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다음은 성별과 연령, 학력 등과 같이 관측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국가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남녀 간의 임금격차를 국가 간 비교하고 이후 연령 간 임금격차와 학력 간 임금격차를 살펴본다.

가. 성별 간 임금격차

[그림 VI-5] 국가 간 비교 - 성별 간 임금격차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위 그림은 여성의 임금 수준을 남성 임금으로 나눈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은 지속적으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감소해온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독일은 1985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은 그 속도가 한국보다는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의 국가 간 비교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5% 수준까지는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도 한국은 여성임금이 남성의 65% 일본은 55%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낮은 임금 수준이 두 국가의 여성 고용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VI-6] 남녀 간 고용률 격차(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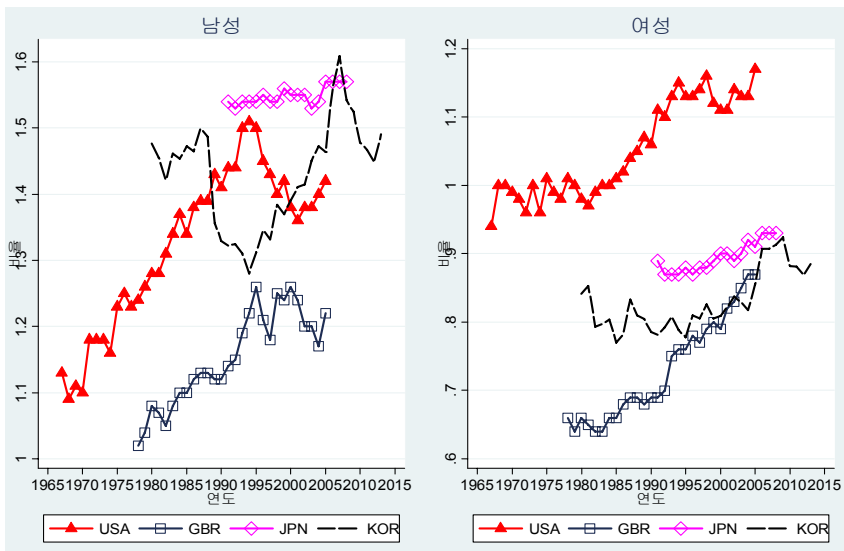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위 그림은 1980~2014년 동안 연령별 남녀의 고용률 변화를 5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남자의 평균 고용률이 75% 수준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률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각종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보육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각종 육아 및 보육정책 지원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 노동력에 대한 보상율(return rate)이 낮은 상황에서는 보육지원 정책만으로는 여성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 낮은 임금이 여성 경제활동 불참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참가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만을 보육정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음 그림은 연령 간 임금격차를 남녀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VI-7] 국가 간 비교 - 남녀별 연령 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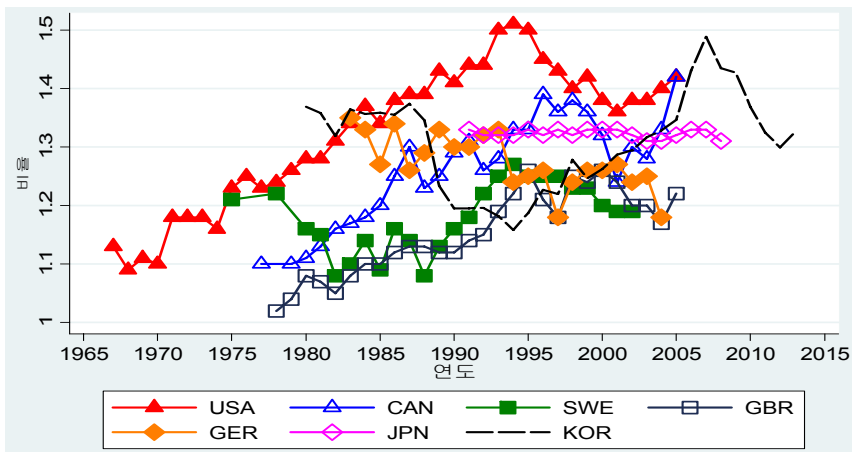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미국, 영국, 일본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여성의 경우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후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에 단절이 생기면서 노동시장 경험연수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 재편입되더라도 이전 직업에서 받는 임금 수준을 못 받거나 이전의 경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을 나갔던 여성들이 다시 편입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과 더불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더라도 경력이 유지되고 이전의 경험연수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나. 연령 간 임금격차

[그림 VI-8] 국가 간 비교 - 연령 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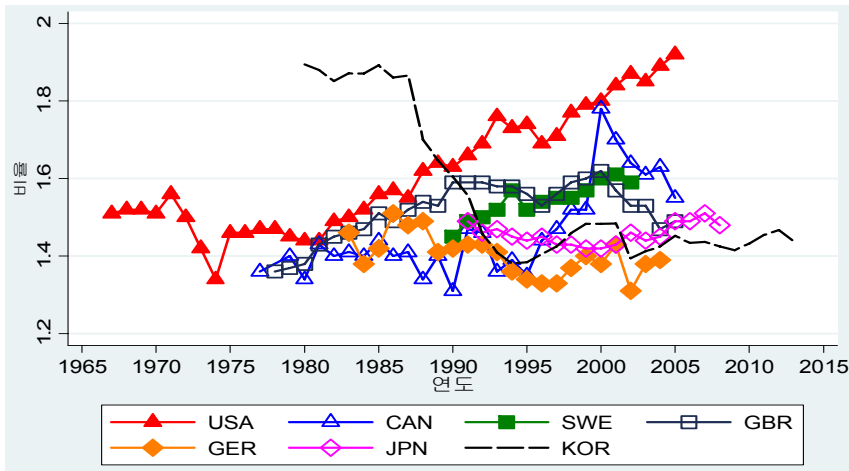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연령 간 임금격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은 증가하다가 최근 떨어지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독일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본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여타의 국가들과는 달리 V자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학력의 구성비가 1980년대 중반에 급속하게 바뀌면서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학력 구성비가 안정적으로 된 1995년 이후 연령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연령 프리미엄 추세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에 비해 15년 간격을 두고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다. 학력 간 임금격차

[그림 VI-9] 국가 간 비교 - 학력 간 임금격차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학력 간 임금격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은 여타의 국가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학력 임금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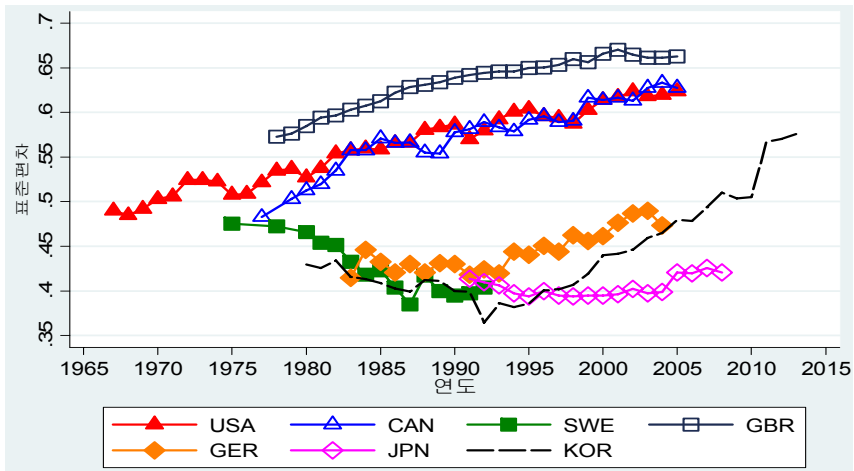
국은 1987년을 기점으로 학력 임금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00년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학력에 대한 프리미엄도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볼 때 한국은 미국과 같이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졸자에 대한 수요 변화 없이 정부 정책의 변화로 대졸자 공급이 증가하면서 대졸자의 임금 수준이 하락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대학에 대한 보상률(return rate)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졸자들이 고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Han(2014)에 따르면 외환위기 시점에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실업률이 모두 증가했지만 외환위기에서 회복된 이후에 대졸자의 실업률은 원상태로 되돌아갔지만 고졸자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전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고졸자들의 높은 실업률은 대부분 높은 이직률(job separation rate)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졸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면서 대학에 대한 수요증가 현상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최근 들어서는 대졸자 공급이 과잉되어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문제가 발생하여 청년 실업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반면 대졸자 임금은 공급 과잉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과거 1990년대 노동시장에 진입한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연령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어 가격이 신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졸자이지만 경험연수가 낮은 청년층에서 취업이 어렵게 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장년층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3.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마지막으로 로그임금의 잔차 부분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앞서 살펴본 7개 국가의 로그 잔차 임금의 표준편차이다. 스웨덴과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에서 표준편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노동생산성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개인들은 생산성 충격에 대비하여 예방적 저축을 늘이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정부는 조세와 재정정책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보험을 제공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그림 VI-10] 국가 간 비교 - 로그 잔차 임금 표준편차



자료: <http://www.journals.elsevier.com/review-of-economic-dynamics>의 국가별 데이터 저자 계산 (검색일자: 2015. 4. 1)

VI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미시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35년간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미시자료는 가구 자료인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과 사업체 자료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이다. 같은 자료 내에서도 조사대상의 범위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범위를 가장 긴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해서 분석하고 있다.

자료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 자료들이 제공하고 있는 소득의 개념과 구성 방법을 파악하여 비교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경우 월간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 변화를 통제할 시간당 임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계동향조사나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은 근로주수나 월간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으로의 환산이 불가능하다. 대신 노동공급 부분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월급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밖의 사항으로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자영업자의 월소득도 월급여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상의 지위를 통해서 대상을 임금근로자로 한정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국노동패널을 제외한 다른 자료는 세전소득이지만 한국노동패널은 세후소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을 통해서 측정된 소득수준이나 불평등 지수는 여타의 자료들과 직접적인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소득 불평등 분석에 앞서 각 자료들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 중 임금 및 급여를 비교하고 있다. 각 자료들의 조사 대상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총량변수를 직접 비교하는 데 무리

가 있다. 따라서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의 임금 수준을 1인당 월급여로 환산해서 비교하였다. 추세 측면에서는 모든 자료들이 국민계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준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국민계정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한국노동패널은 국민계정 결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후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세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와 비교해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중치가 개인이 아닌 가구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되나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재정패널은 수준 측면에서 국민계정과 가장 잘 연결되고 있다.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전체 소득 불평등을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와 GINI 계수, 90/10 분위 비율 등으로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소득을 관측 가능한 부분과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관측 가능한 부분은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측되지 않는 부분은 임금 방정식을 추정하고 남은 잔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소득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노동패널을 제외하고는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세후소득임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추세가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계열을 살펴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V자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뿐만 아니라 GINI 계수, 90/10 분위 비율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90/10 분위 비율을 90/50 분위 비율과 50/10 분위 비율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한국은 상위계층(90/50)과 하위계층(50/10)에서 모두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위계층의 소득 불평등 증가가 전체 소득 불평등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지난 3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임금격차 감소 추세가 둔화되어 지난 10년간 여성 임금이 남성 임金的 65%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감소는 1980년대 초 대학정원 증가로 인해 1980년대 후반 대졸자의 공급이 급격히 확대된 결과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격차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령 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은 관측되는 인적 사항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임금 방정식을 추정한 후 얻은 잔차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잔차의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개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나타내는 고정효과 부분의 표준편차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잔차 표준편차의 증가는 개인의 생산성 충격의 분산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생산성 충격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구적 충격 부분과 일시적 충격 부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그 결과 고정효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의 크기는 추정방법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타의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항상소득가설에 기반해서 개별 생산성 충격을 영구적 충격과 일시적 충격으로 구성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불완전 시장하의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통한 정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증적인 임금 공분산 구조를 잘 추정해낼 수 있는 간단한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소득 불평등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소득 불평등에 앞서 코호트별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임금 프로파일을 살펴본 결과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낮은 임금 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제 성장률과 임금 성장률 둔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이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로그실질임금의 표준편차로 측정된 소득 불평등은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대가 이전세대에 비해 학력에 대한 인적 구성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개별 생산성 충격의 크기 증가로 파악된다. 즉, 현재 30대에서 40대 후반은 저성장과 고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는 세대라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분석된 한국의 결과를 RED2010에서 분석된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은 스웨덴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들 국가들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는 계층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소득 불평등 상위계층에서 증가하는 반면(90/50 분위 비율이 증가) 한국은 상하위 계층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90/50 분위 비율과 50/10 분위 비율이 모두 증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여타 국가들은 최상위 계층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최하위 계층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도 여타의 국가들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동일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여성 소득수준이 남성의 65%인 데 반해 일본(55%)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7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도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과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하락을 겪은 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하락도 대졸자의 공급 증대로 일어난 것인 만큼 미국에서 나타난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잔차 부분의 표준편차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충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1998년 이후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가계동향조사를 비롯하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과 같은 가구 자료와 사업체 조사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각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들로 인해 어느 한 가지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소득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가장 긴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자료 범위를 일관되게 가장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타의 자료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10인 이상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구 소득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는 다른 자료들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여타의 자료보다 1인당 근로소득 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은 패널 자료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앞서 살펴본 두 자료에 비해 확연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정패널의 경우 1인당 근로소득의 수준이 국민계정 피용자보수 중 임금 및 급여와 가장 근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자료들보다 정합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추세를 분석하기에는 자료 구축이 짧게 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다른 자료들과는 달리 세후소득을 제공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각 자료들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을 가장 길게 분석하기 위해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관측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각종 임

금격차에 대한 분석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가 전체적인 추세를 분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가계동향조사나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의 결과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잔차 부분에 대한 요인 분해는 분석의 특성상 패널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세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⁴⁰⁾

2.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불평등 증가 원인을 세분화해서 살펴본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하위계층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소득 불평등 증가를 설명하는 최상위층으로의 부의 집중과는 다른 현상이다. 한국은 상위층과 하위층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하위 계층에 대한 공적부조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하위 계층의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⁴¹⁾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최하위 저소득 계층을 직접 정책목표의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장률과 소득 불평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40) 재정패널의 경우는 자료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패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들이 추세를 분석하는 데 크게 유의미하지 않아서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요청 시 저자가 제공할 수 있다.

41) Chang, Chang and Kim(2015)

관측되는 부분으로 발생한 소득 불평등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와 학력 간 임금격차의 추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비록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국제적 수준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한국과 일본(동시에 두 국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M자형으로 나타남)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은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보육지원 정책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은 여성 경제활동 불참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굳이 노동시장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쉽게 이탈하는 것이다. 여성 임금 수준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경험연수에 대한 프리미엄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을 중단한 경우 이전 경력을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진출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경력으로 쌓은 인적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과 기회비용을 더 낮춤으로써 경제활동 참가 유인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정책과 경력 단절 이후에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의 편입을 통해서 경험연수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⁴²⁾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한 후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률을 높이고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금격차는 오히려 감수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지만 대졸자 프리미엄이 경험연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부분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

42) 경력 단절로 인해서 인적자본이 감가상각되는 부분은 당연히 경험 연수 프리미엄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전 경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 편입되어 이전의 인적자본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력으로 인해 축적된 인적자본이 초기 인적자본으로 활용되고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경험연수로 축적된 인적자본이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는 학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감소해야 정상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학력과 경험 연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생산 기술이 아닌 다른 제도적 환경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즉, 학력 프리미엄이 경험연수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관측되지 않는 부분의 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서 이직률(job separation rate)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직률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입직률(job finding rate)도 높아야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입직률은 외환위기 전후로 변화된 것이 없다. 앞으로 고용정책은 이직률을 낮춰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입직률을 높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⁴³⁾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43) 이직률이 높으면 실업으로의 유입이 증가되어 실업률이 증가되지만 입직률을 높이면 실업에서의 유출이 증가되어 다시 실업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업률은 동일하지만 입직률과 이직률이 낮은 경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반면 입직률과 이직률이 높은 경우 유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승복, 「우리나라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증장기적 변화」,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5, pp.19~29.
- 강신욱 외,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04, 2014.
- 김낙년,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낙성대경제연구소 WP 2012-03, 2012a.
- _____,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낙성대경제연구소 WP 2012-07, 2012b.
- 김상조,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2015.
- 김용성,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7.
- 김우영, 「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 한국은행, 2008.
- 김종면·성명재, 『장기인력수급 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3.
- 김준영 외, 「10분위 기준 집단내 집단간 소득불평등 시계열분석과 개선효과」, 『재정학연구』, 2(1), 한국재정학회, 2009, pp.41~77.
- 김태홍,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분해」, 『여성연구』, 84(1), 2013, pp.31~61.
- 김혜련, 『근로빈곤의 동태적 분석』,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5장, 통계개발원, 2010.
- 금재호, 「성별 임금격차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17(3),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 박강우, 「우리나라 학력별 임금격차의 요인분해(1974-2011)」, 『산업경제연구』

- 27(1), 한국산업경제연구원, 2014, pp.1~32.
- 박기백 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
- 박기백 외,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 박명호·전병목,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반정호,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조세 및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 -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8, pp.22~40.
- 박찬용 외,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12, 2002.
-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a.
- _____,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2b.
- _____, 『소득분배 변화 추이의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1c.
- 성명재·김종면,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4.
- 여유진 외,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11, 2005.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이병희 외,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2007.
- 원종학·성명재,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 전병목·장용성,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정진호 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정진화,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 - 혼인상태 및 직종특성
 별 비교」, 『노동경제연구』 30(2), 한국노동연구원, 2007, pp.33~60.
 최성은, 「이전지출의 사회후생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4(4),
 한국재정학회, 2011, pp.117~144.

Aiyagari, S. Rao, “Uninsured idiosyncratic risk and aggregate saving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59 (3); 1994, pp.659~684.

Altonji, Joseph G., and Charles R. Pierret, “Employer Learning And
 Statistical Discrimin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116(1); 2001, pp.313~350.

Autor, David H., Lawrence F. Katz and Melissa Schettini Kearney, “Trends
 in U.S. Wage Inequality: Re-Assessing the Revisionis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2); 2008, pp.300~323.

Bewley, T., “Stationary monetary equilibrium with a continuum of
 independently fluctuating consumers,” *Contributions to Mathematical
 Economics in Honor of Gerard Debreu* 79, edited by Hildenbrand,
 Werner, Mas-Colell, Andreu, 1986.

Card, David, and Thomas Lemieux, “Can Falling Supply Explain The
 Rising Return To College For Younger Men? A Cohort-Based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116(2); 2001,
 pp.705~746.

Carneiro, Pedro, and Sokbae Lee, “Trends in Quality-Adjusted Skill Premia
 in the United States, 1960-2000,”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01(6); 2011, pp.2309~2349.

Chang, Bo Hyun, Yongsung Chang, and Sun-Bin Kim, “Pareto Weights in
 Practice: Income Inequality and Tax reform,” RCER Working Papers
 590, University of Rochester -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RCER), 2015.

Yongsung Chang and Sun-Bin Kim, "Heterogeneity and Aggregation: Implications for Labor-Market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97(5); 2007, pp.1939~1956, December.

Deaton, A., & Paxson, C., "Intertemporal Choice and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2(3); 1994, pp.437~467.

Farber, H. S., & Gibbons, R., "Learning and Wage Dynamic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111(4); 1996, pp.1007~1047.

Fatih Guvenen, Fatih Karahan, Serdar Ozkan and Jae Song, "What Do Data on Millions of U.S. Workers Say About Life Cycle Income Risk?,"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Research Paper, 2013, pp.2013~2302.

Floden, M., and Lindé, J., "Idiosyncratic Risk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Is There a Role for Government Insuranc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Elsevier for the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4(2); 2001, pp.406~437.

Peter Gottschalk, "Inequality, Income Growth, and Mobility: The Basic Fac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11(2); 1997, pp.21~40, Spring.

Guvenen, Fatih, Greg Kaplan and Jae Song, "How Risky Are Recessions for Top Earners?,"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04(5), 2014, pp.148~153.

Guvenen, Fatih, Burhanettin Kuruscu and Serdar Ozkan, "Taxation of Human Capital and Wage Inequality: A Cross-Country Analysis," NBER Working Papers 1552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2009.

- Guvenen, Fatih, and Burhanettin Kuruscu,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the U.S. wage distribution, 1970-2000,"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Staff Report 427, 2009.
- Han, Jongsuk, "Labor market flow change in Korea after 1998 crisis," working paper,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4.
- Heathcote, Jonathan, Fabrizio Perri and Giovanni L. Violante, "Unequal We Stand: An Empirical Analysis of Economic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67-2006," *Review of Economic Dynamics*, Elsevier for the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13(1), 2010, pp.15~51.
- Hornstein, Andreas, Per Krusell and Giovanni L. Violante, "Frictional Wage Dispersion in Search Models: A Quantitative Assess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01(7), 2011, pp.2873~2898.
- Huggett, M., "The risk-free rate in heterogeneous-agent incomplete-insurance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7; 1993, pp.953~969.
- Imrohoroğlu, A., "Cost of business cycles with indivisibilities and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989, pp.1364~1383.
- Jaimovich, Nir, and Henry E. Siu, "The Young, the Old, and the Restless: Demographics and Business Cycle Vola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99(3); 2009, pp.804~26.
- Jeong, Hyeok, Yong, Kim and Iourii Manovskii, "The Price of Exper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05(2); 2015, pp.784~815.
- Katz, Lawrence F., and Kevin M. Murphy,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107(1); 1992, pp.35~78.
- Krueger, D., Perri, F. Pistaferri, L., and Violante, G. L., "Cross Sectional

- Facts for Macroeconomist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Elsevier for the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13(1); 2010, pp.1~14.
- Krueger, D., and F. Perri, L., “Does Income Inequality Lead to Consumption Inequality? Evidence and Theory –super-1,” *Review of Economic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73(1); 2006, pp.163~193.
- Krusell, Per, Ohanian, L. E., Rios-Rull, J. V., and Violante, G. L., “Capital-Skill Complementarity and Inequality: A Macroeconomic Analysis,” *Econometrica, Econometric Society*, 68(5); 2000, pp.1029~1054.
- Per Krusell & Anthony A. Smith & Jr., “Income and Wealth Heterogeneity in the Macroeconom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 106(5); 1998, pp. 867~896, October.
- Lemieux, Thomas, “Increasing Residual Wage Inequality: Composition Effects, Noisy Data, or Rising Demand for Skill?,”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96(3); 2006, pp.461~498.
- Lise, Sudo, Suzuki, Yamada and Yamada, “Wage,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in Japan, 1981-2008: From boom to lost decade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Elsevier for the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17(2014); 2014, pp.582~612.
- Pijoan-Mas, J., “Precautionary Savings or Working Longer Hour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Elsevier for the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9(2): 2006, pp.326~352.
- Piketty, Thomas, and Emmanuel Saez,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2003, pp.1~39.
- Piketty, Thomas, “Putting Distribution Back at the Center of Economics: Reflections on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9(1), 2015, pp.67~88.
- Quadrini, Vincenzo, and José-Victor Rios-Rull, “Inequality in Macroeconomics,”

-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2, 2014.
- Rios-Rull, J. V., "Models with heterogeneous agents," *Frontiers of Business Cycle Research*, edited by Cooley, Thoma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5, pp.98~125.
- Shin, Donggyun and Solon, Gary, "Trends in men's earnings volatility: What does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show?," *Journal of Public Economics, Elsevier*, vol. 95(7-8); 2011, pp.973~982, August.
- Tauchen, G., "Finite State Markov-Chain Approximations to Univariate and Vector Autoregressions," *Economic Letters*, 20(2); 1986, pp.177~181.

<통계자료, 웹사이트>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재정패널』.

『한국노동패널』.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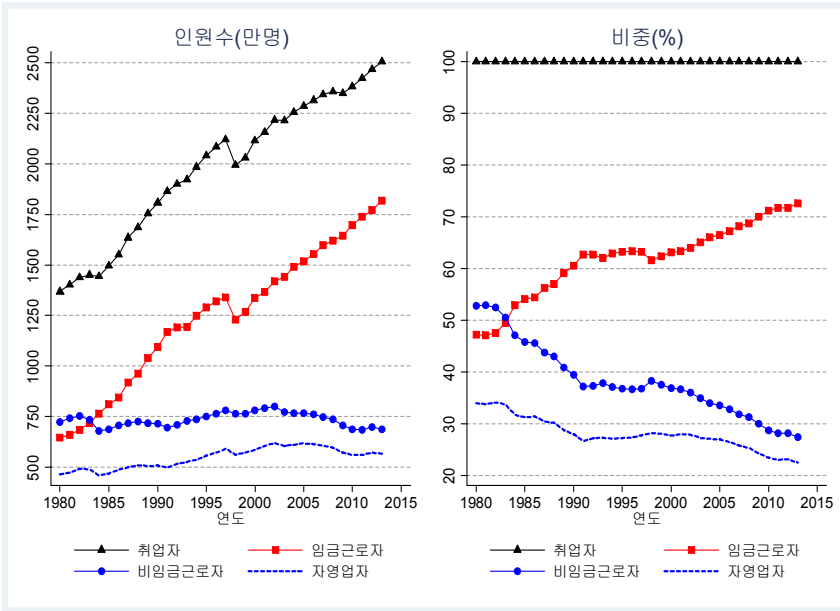
ELSEVIER 홈페이지, <http://www.journals.elsevier.com>, 검색일자 2015. 4. 1.

부 록

1. 취업자 구성비 변화

다음은 취업자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족종사자(비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차)의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 수의 증가속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도 1]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구성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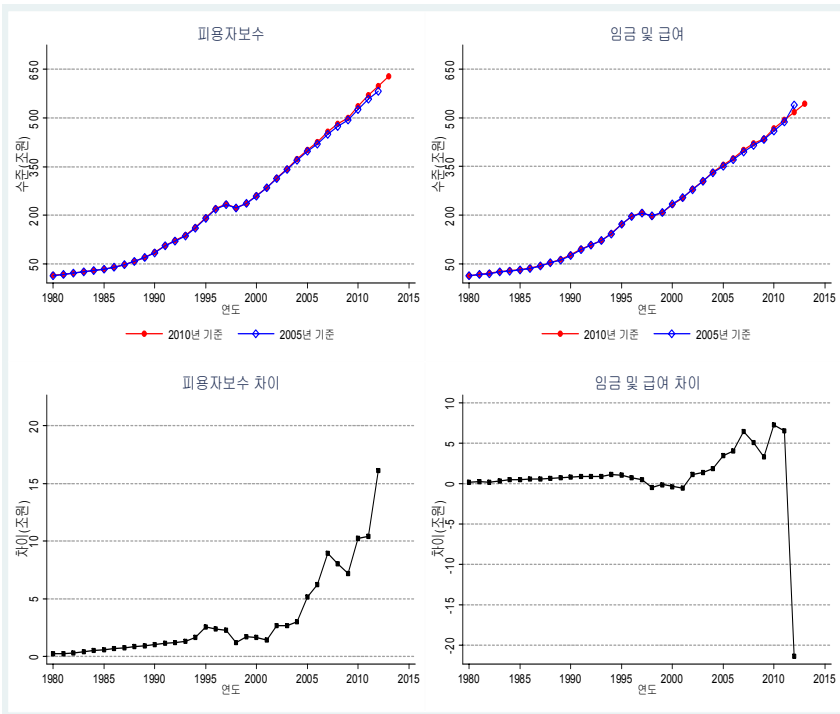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 피용자보수 비교

최근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을 SNA08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시계열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편 전후로 나타나는 피용자보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두 시계열의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부도 2] 피용자보수 2010년 기준과 2005년 기준 비교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5년 기준, 2010년 기준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3. 임금방정식 추정에서 세후 소득 사용 시 문제점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충격을 측정할 때 패널자료들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노동생산성 충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임금을 반영해야 되나 세후소득은 시장임금에 왜곡이 발생된 임금으로 불

수 있다. 가계 예산제약식과 개별 임금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C_t + A_{t+1} = (1 - \tau_W) W_t + (1 + r(1 - \tau_A)) A_t + T_t$$

위 식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별 경제주체의 예산제약식이다. 이번 기의 소비와 저축은 이번 기 근로소득인 W_t 에서 $\tau_W W_t$ 와 $r\tau_A A_t$ 만큼 근로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지불하고 남은 소득과 이전지출의 합과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임금 W_t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ln W_t = X_t \beta_t + u_t$$

여기서 $X_t \beta_t$ 는 학력이나 연령과 같이 관측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고 u_t 는 비관측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잔차로 구성된다. 이 잔차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u_t = \rho u_{t-1} + \epsilon_t, \epsilon_t \sim (0, \sigma_\epsilon^2)$$

여기서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ρ 와 σ_ϵ^2 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임금이 세전소득이다. 하지만 세후소득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잔차 부분에 근로소득세율 부분이 반영되게 된다.

$$\ln(1 - \tau_W) W_t = X_t \beta_t + \ln(1 - \tau_W) + u_t$$

일반적으로 모형에서는 근로소득세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율 부분이 잔차에 포함되더라도 1차 차분을 하거나 고정효과 분석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데이터에서 추정할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실제 근로소득세율은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서 변화하게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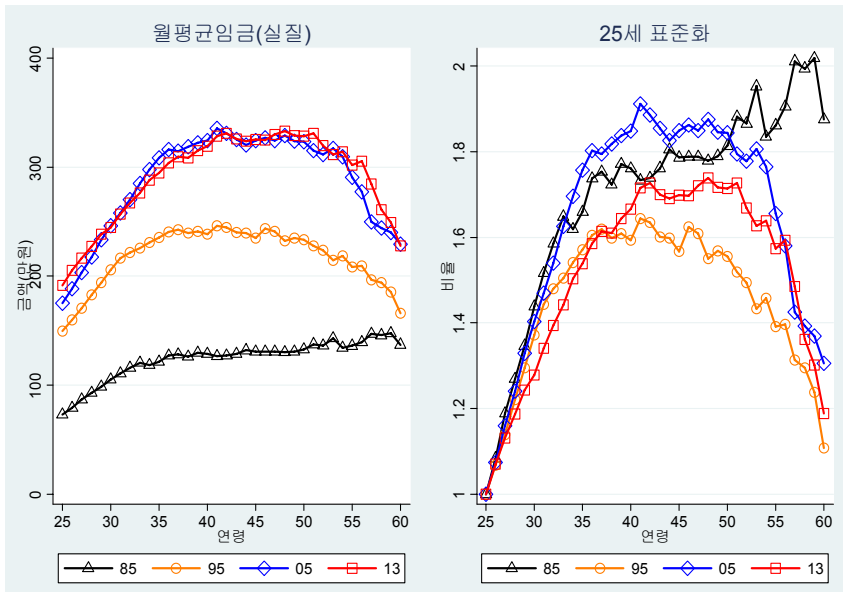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라 실효세율이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후소득을 가지고 추정되는 개별 생산성 충격에 대한 프로세스(ρ 와 σ_ϵ^2 값)는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을 포함하고 있게 된다. 따라서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임금 프로세스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다른 결과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가지고 추정된 임금 프로세스를 추정한 전병목·장용성(2005)의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연도별 생애주기 프로파일

연도별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임금과 소득 불평등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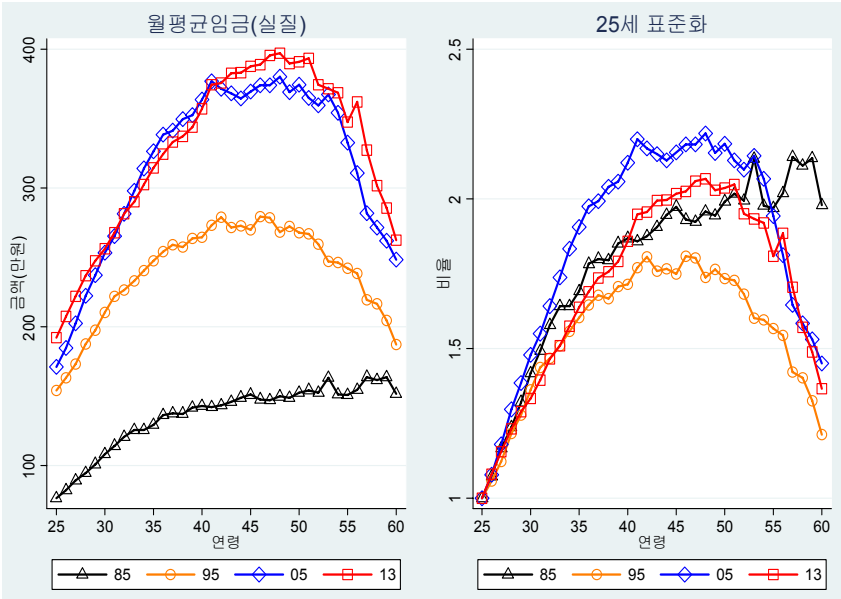
가. 실질임금

[부도 3] 연도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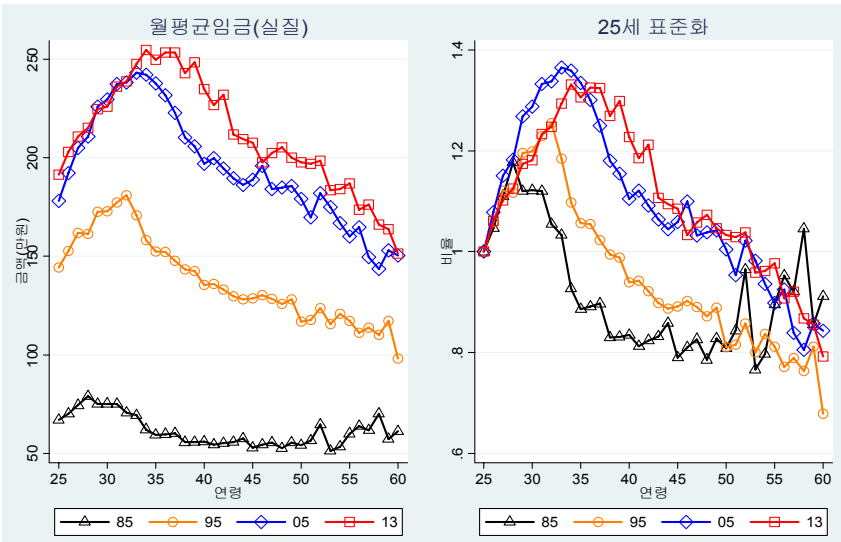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부도 4] 연도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남성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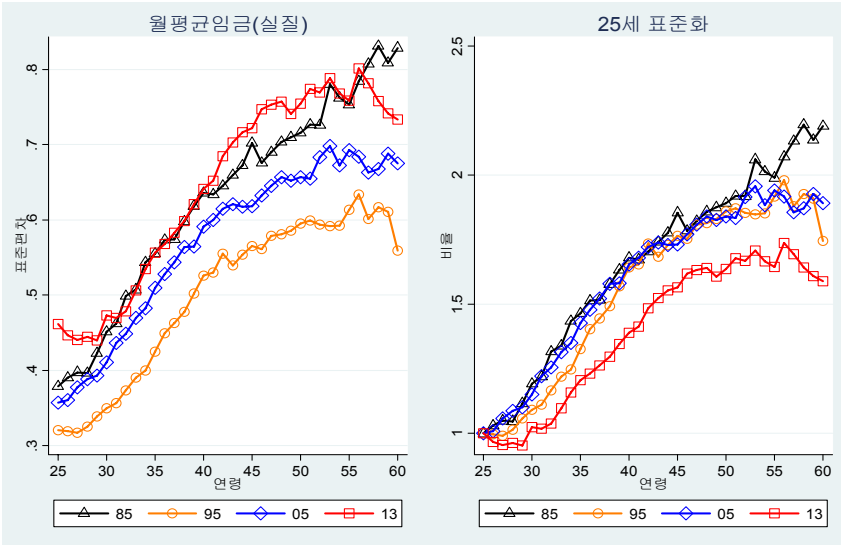
[부도 5] 연도별 생애주기 실질임금 프로파일 - 여성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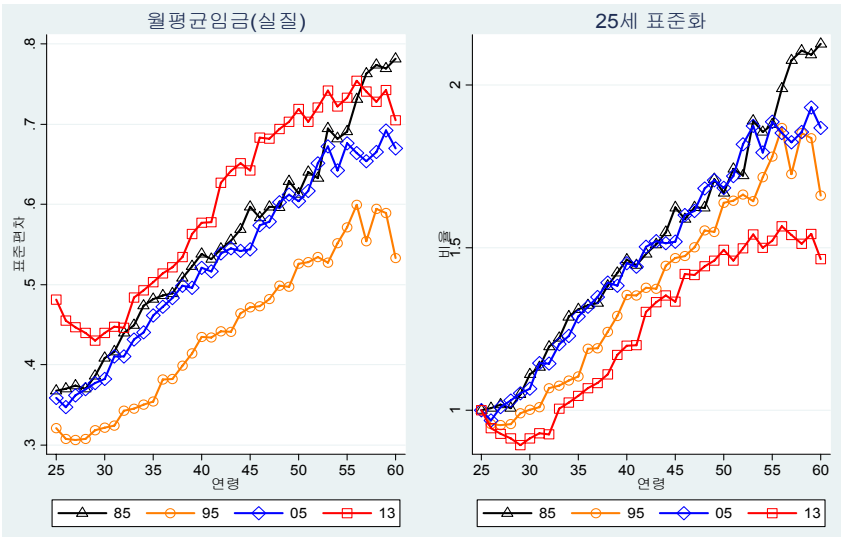
나.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부도 6] 연도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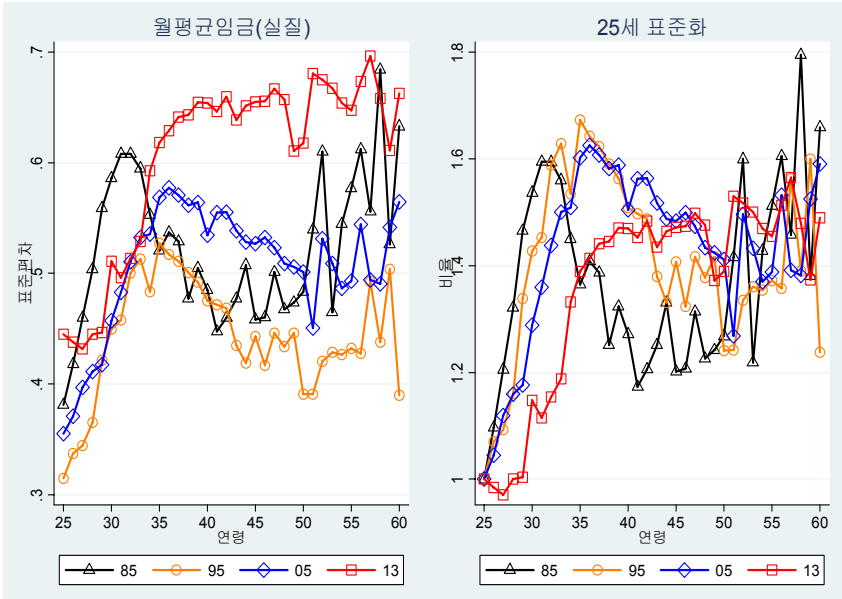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부도 7] 연도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남성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부도 8] 연도별 생애주기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프로파일 - 여성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종석 · 윤성주 · 최승문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미시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35년간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분야 및 분석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Review of Economic Dynamics 특별판 (RED2010)의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소득 불평등 분석에 앞서 우선 각 자료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별 인적 구성 및 임금과 급여 수준을 국민계정과 비교하여 자료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불평등은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GINI 계수, 90/10 분위 비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관측되는 부분, 즉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 격차 및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RED2010에서 분석된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에서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국제적 수준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프리미엄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급격히 감소한 후 2000년대 이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연령 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관측되지 않는 부분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Empirical Analysis on Korean Labor Income Distribution

Han, Jong-Suk
Yoon, Sung-Joo
Choi, Seung-Moon

Using four different publicly-available data sets, we analyze the dynamics of labor income inequality in Korea over last 35 years. We apply the similar frameworks from the special issue of th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RED2010) to look at several dimensions of income inequality including variance of log earnings, Gini coefficient, 90/10 ratio, etc.

We first examine whether the four data sets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by analyzing demographic and earnings variables of each data set. We compare them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National Accounts and give plausible explanations for the observed differences among the data sets.

In Korea, labor income inequality has been increasing not only in the top of the income distribution but also in the bottom of the distribution. Gender gap is decreasing, but it is still 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alyzed in RED2010. College premium decreased rapidly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It has remained relatively constant since

2000. Unobservable components of income inequality has been rising since mid-1990's. This is possibly related to the instability of labor markets. Based on these results,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 저자약력

한종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제학과 졸업
미국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15-12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발행	2015년 12월 31일
저자	한종석 · 윤성주 · 최승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7,000원
조판 및 인쇄	일지사 (02)503-6971
I S B N	978-89-8191-798-2 93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